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

2017. 1. 18.

I. 지난 4년간 금융정책 평가	1
II. 2017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21
III. 2017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34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35
핵심과제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	36
핵심과제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40
핵심과제③ 한계기업 구조조정	48
핵심과제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	50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55
핵심과제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	56
핵심과제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	61
핵심과제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	64
핵심과제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67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71
핵심과제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72
핵심과제⑩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75
핵심과제⑪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80
핵심과제⑫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90

I. 지난 4년간 금융정책 평가

◆ 지난 4년간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제고

* 국정과제('13년), 금융비전('13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년) 및 금융개혁('15~'16년)

- 감독당국 개선, 금융규제 개혁, 핀테크 활성화,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등을 통해 금융의 경쟁력과 외연을 확대
- 기술금융 도입, 클라우드 펀딩,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
-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등 금융 신뢰성 제고
-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업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 ☞ 금융이 우리경제의 든든한 뒷받침이자 성장동력이 되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일관되게 추진

1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핀테크 등 “금융개혁”을 통해 경제의 혈액으로서 금융업의 경쟁력과 외연을 제고

□ 금융규제개혁 등 금융당국부터 변화를 도모

- 법령규제 개선, 그림자규제 폐지, 자율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모든 단계의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법령규제¹⁾와 그림자규제²⁾를 전수조사·정비하고, 금융규제·감독의 원칙 및 절차인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16.1월)

* 1) 1,064건 중 211건 폐지·개선 2) ('15) 700여건 → ('16년말) 50건

- 자율규제 개선(245개 규정 검토→99개 규정 폐지·개선)을 통해 금융규제 작업 완결

- 검사·제재 개혁('15.4월)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금융회사 영업에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에서 규칙 준수를 감독하는 심판으로 전환

* 검사(위규적발 → 컨설팅) 및 제재(개인 → 기관·금전제재) 개편 추진

* 금융회사 임직원 직접제재 : '15.上 525건→'16.上 213건(△59%)

-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유명무실하였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

* '16.12월까지 1,312개 회사 방문, 건의사항 5,677건 중 3,419건 회신(1,656건 수용)

** ('01~'14년) 10건 → ('15~'16년) 1,095건(일괄회신 885건, 온라인 210건)

□ 기술금융 등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

- 기업의 기술,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시스템*'을 정착·활성화

* '14.7월 이후 기술금융으로 대출 58.1조원, 투자 5,926억원 지원('16.11말 기준)

- 낡은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하여 기업인에게 폐자부활 기회를 부여하고, 창업 활성화 유도

* 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연대보증 폐지('13.4월), 외환위기 당시 중기 연대보증인 지원('13.7월), 신·기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전면면제('16년초)

○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

- 클라우드 펀딩*,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투자 비중 확대를 유도

* 클라우드 펀딩 시행('16.1월) 이후 110개 기업(115건)이 174억원 자금조달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개장('13.6월), 상장·공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 지속

○ 창의·기술형 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시행

* 산은·기은 역할 강화방안('15.11월), 정책금융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16.3월)

□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업의 혁신적 도약

○ 금융과 IT 융합(Fin-tech)을 통한 새로운 혁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생태계조성, 인프라구축 등 다각도로 노력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 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사 지원, 금융회사 제휴알선 등 생태계조성

***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16.8월), 신용정보원('16.1월) 등 인프라 구축

-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36종), 간편송금(12종)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 활성화

○ 인터넷전문은행(24년만의 은행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 촉진

* (계좌이동서비스) 출시 14개월간 약 1,020만건 이용 돌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출시 3주만에 238만 계좌를 온라인으로 해지

* (비대면실명확인) 22년만에 허용 후, 13개월간 73.4만계좌 비대면 개설('16.12월말)

* (ISA) 출시 7개월만에 총가입금액 3조원 돌파(240만계좌)

* (보험상품 자율화) 22년만에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전면 개편

* (보험다모아) 약 16%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 보험상품 출시('16.12월, 9개사)

2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의 신뢰성 제고

◆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조사단 설치 등 금융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강화

○ 국민행복기금 출범('13.3월)을 통해 281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고 56만명의 채무를 감면(당초 목표인 5년간 32.6만명 초과달성)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3년~'16.11월까지 31.1만명의 채무조정 지원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가용소득 수준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방식을 선제적·맞춤형으로 개편('16.1월)

- 법원 등과 협업을 통해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Fast-Track을 구축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16.12월)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13년~'16.11월간 18.4조원, 185.3만명 혜택) 확대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

* 4대 서민상품 공급액 : ('12년) 3.6조원 → ('15년) 4.7조원 → ('16년) 5.2조원(예상)

- 주거(임차보증금 대출), 교육, 노후 대비(저소득층 실버보험) 등 서민층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 공급

* 예) 임차보증금 대출(2천만원), 미소드림 적금(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 고령자 대상 실버 보장성보험 등

○ 현장밀착의 수요자별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16.9월) 및 통합지원센터 구축(총 33개)

○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서민 지원 강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추진

* '16.12월말 현재 총 3,729억원(은행 2,504 / 저축은행 1,225) 지원

** 영세·중소 가맹점 0.7%p 인하 (영세 : 1.5%→0.8%, 중소 : 2.0%→1.3%)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34.9% → 27.9%로 인하('16.3월, 대부업법 개정)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및 시장질서 규제체계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15.11월, '15.12월 규제개선방안 마련)

* 대출계약 철회권 : 은행은 '16.10월, 2금융권·대부업은 12월 시행

* 위험 투자성 상품판매 관련 **적합성 보고서 제도** 도입('16.10월)

- 금융회사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월) 마련·제시

-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내용을 '지식'에서 '**생활**'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예: 전문강사 확대)

* 초·중·고 교과과정(통합사회, 필수교과목 등)에 실용금융 내용 확대추진

- 일상생활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차례의 **20대 금융관행 개혁** 및 **5대 금융악 근절*** 추진

*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사금융, ③불법추심, ④꺾기, ⑤보험사기

□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통해 금융의 신뢰성 제고

- 정보유출, 금융사기 등 금융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튼튼한 시스템*** 구축

*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13.11월), 개인정보 보호대책('14.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13.12월, '14.12월), 유사수신 근절대책('16.12월)

- 자본시장조사단 설치('13.9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15.7월) 등을 통해 **증권시장의 규율 확립** 도모

- **회계투명성 제고, 공시범위 확대** 등 시장내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회계제도 개혁방안('13.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월), 공시·회계제도 개선방안('16.5월),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16.10월)

3 안정적 금융시스템 구축 노력

◆ **가계부채, 기업부실 등 잠재 리스크요인 관리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확보 및 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화된 여신관행의 자율적인 정착 유도

* 은행('16.2월), 보험회사('16.7월) 등 업계 자율적으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하고, 상호금융권까지 쉼 업권으로 확대

- **안심전환대출 공급**('15.3월, 32조원)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여 **질적 구조개선** 도모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구조개선 측면에서 성과
(→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

* [분할상환] ('12월) 13.9% → ('15월) 38.9% → ('16.9월) 43%

* [고정금리] ('12월) 14.2% → ('15월) 35.7% → ('16.9월) 41%

- **내집연금 3중세트 출시**('16.4월)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소득 증진 및 주거안정, 가계부채 감축 등 효과

* 내집연금 3중세트는 '16.4월 출시 이후 약 1,620명에게 9,414억원 공급

-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집단대출***,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

* 보증기관 중도금보증 부분보증(100→90%) 도입,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 [보증기관별 2건 → 통합 2건]

** 담보평가의 객관성 제고,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한다 강화 등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제활력 강화,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및 서민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

□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 및 '신속한 구조조정 체계'에 따라 구조조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 경기민감업종, 상시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별로 일관된 원칙 마련

-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를 통해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도 마련

-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5개 산업별 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15.12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석유화학·철강 '16.9월 / 조선·해운 '16.10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16.3월 시행),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도입 등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 금융사 건전성 제고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철저 대비

- 은행 바젤Ⅲ, 증권사 新NCR 등 건전성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지속 보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해 철저히 감독

* '16.3분기말 은행 BIS 14.7%, 보험 RBC 294%, 증권 新NCR 571% 등
 全 금융업권이 감독규정상 기준을 상회

- 금융위/원 합동 금융시장 점검반, 기재부·한은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운영

-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시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과감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도 철저하게 준비

- 외화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회사채시장 양극화 등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시행

* 은행 외화스트레스테스트 매월 실시, 외화 LCR규제 도입('17.1월) 등

**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13.7월),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16.7월) 등

참고 1

금융개혁의 주요 성과 ('16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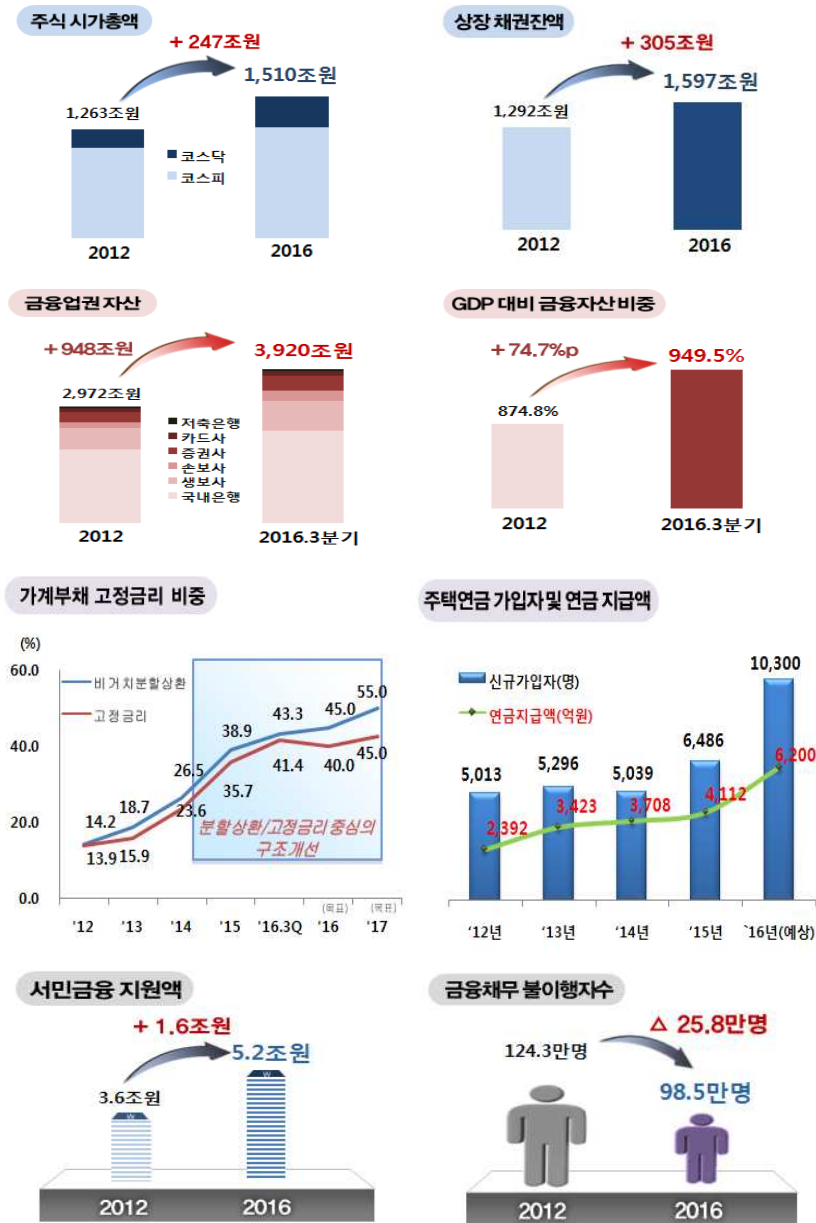
	주요 내용	성과 및 계획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검사제재개혁 (개인제재축소, 컨설팅검사)	컨설팅검사 '15년 108회 실시 → '16년 200회 목표 (216회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 '16.1월 (금융규제의 합리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원칙·절차 규정)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경감, 자율책임문화 조성
	금융위 옴부즈만 '16.2월 (종립적, 독립적 시각에서 금융규제 감시)	비공식 금융규제 감시 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금융규제개혁 추진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개선)	사후규제로의 전환 등 211개 규제개선 행정지도 감소(700 → 50개)
	성과중심 문화 확산 (성과와 보상간 연계 및 전문성·역량 제고)	'16년내 9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도입
	현장지원반 활동 (금융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애로를 즉시 해소)	총 1,312개 금융회사 방문 총 5,677건 건의사항 접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	인터넷전문은행 '16.7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내 손안의 은행)	ICT와 금융이 융합한 새로운 은행이 24년만에 탄생
	비대면 실명확인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가능)	37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73.4만건 제공
	계좌이동서비스 (소비가자가 원하는 은행으로 주거계좌를 손쉽게 이동)	1,020만건 계좌 변경 은행간 경쟁 촉진

	주요 내용	성과 및 계획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	신용정보원 출범 [16.1월] [전 금융권 신용정보를 한 곳에 집중]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 수립 [5.25] 최초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11.15]
	핀테크 산업 육성 [규제개선 및 핀테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간편결제 서비스 36종 출시 서비스 만족도 74.2%
	보험다모아 [328여개 상품 쉽게 보험료 비교]	접속자수 약 113만명 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 약 16% ↓]
	22년만에 보험규제 개편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상품신고 부담 70% 감소 표준약관 제도 전면 정비]
기업금융 강화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255건 참여, 115건(110개사) 성공(174억원)
	기술금융 안착 [우수 기술기업 금융지원 확대]	총 58.1조원 [16.11누적] 지원 → '19말까지 100조원 공급 추진
	코넥스시장 활성화 [시장규모·거래규모 대폭 증가]	상장기업 [13] 21 → [16.12] 141 시가총액 [13] 0.5조 → [16.12] 4.3조
	정책금융 개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기은 : 창업성장초기 지원 확대 [14] 9조원 → [18] 15조원 산은 : 중견예비중견 지원 확대 [14] 22조원 → [18] 30조원 신·기보 : 창업·성장초기 보증 확대 [14] 14.3조원 → [18] 17.6조원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3 Track 구조조정 체계, 유암코 기능확대]	구조조정 대상 '16년 208개 선정 조선·해운 등 경부민감업종 구조조정

	주요 내용	성과 및 계획
가계부채 관리	안심전환대출 [31.7조원, 32.7만건]	2.7조원 부채 감축 [15.3~16.11월] 연 0.3조원 이자부담 절감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	분할상환 [13초 14.2% → 16.9말 43.3%] 고정금리 [13초 13.9% → 16.9말 41.4%]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국형 여신심사 관행 정착]	은행 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보험 7월 잔금대출 17.1.1일 이후 분양공고 사업장 ※ 상호금융권은 17/1분기 중 시행 추진
	내집연금 3종세트 [16.4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채관리 → 1석 3조]	생애 전반에 고른 부채 감축 노후 대비 및 주거 안정
서민·취약계층 지원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 다양화 및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보증보험 연계 대출 1조원 공급 목표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0.7%p 인하 등]	총 6,700억원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34.9% → 27.9%]	최대 330만명 총 0.7조원 이자부담 경감
	서민금융진흥원 [16.7]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원스톱·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16.9.23일 출범
	계약철회권 시행 [개인대출계약에 대한 숙려제도]	대출 철회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상환비용 300만원 → 150만원 감소] ※ 2억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ISA [16.3.14] [순이익의 최대 250만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240만명 계좌 계좌총잔고 3.4조원

참고 2

숫자로 보는 지난 4년간 금융의 변화



4 평가

◆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취약계층 보호 및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 할 필요

- 아울러 그간 추진해 온 금융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작업 완수도 병행

□ (리스크 관리)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 할 필요

- 시장금리 상승 흐름 속에서 취약계층(예: 연체차주, 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및 지원 필요
- 상시·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시장 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민생안정)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부문이 서민·중기의 버팀목이 되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정책 서민금융, 정책 중기자금 등 가용 가능한 금융정책 수단을 예년에 비해 확장적으로 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엄정한 금융시장 규율 확립 등을 통해 소중한 국민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

□ (금융개혁) 미국 신행정부 정책기조, 세계적인 핀테크 경쟁 등에서 우리 금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개혁 완수 필요

- 금융개혁 과제(1차 70개, 2차 36개)의 국민 체감도 제고 추진
→ 금융개혁이 상시화·안착되도록 개혁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
- 기술금융, 핀테크 등 그간 추진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화·고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

참고 1 2013~2016년 주요 금융정책 (www.fsc.go.kr 참조)

	실물경제 지원 및 금융업경쟁력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13. 上	제2금융권 연대보증폐지(4월)	국민행복기금 추진(3월)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1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5월)		
	성장사다리펀드 활용방안(5월)	금융교육 종합포털 개통(6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6월)
'13. 下	정책금융역할 재정립(8월)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9월)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7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9월)	은행·은행지주 바젤III자본규제(8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12월)	불공정거래 근절대책(9월)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12월)	동양 유사사례 재발방지(11월)	기업부실 사전방지(11월)
	증권사 M&A촉진(12월)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대책(12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1월)		
	공동검사 개선(1월)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3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2월)
'14. 上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1월)		증권사 NCR 제도개선(4월)
	기업상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4월)		
'14. 下	금융규제 개혁방안(7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8월)		
	전자상거래결제 간편화·활성화(7월)	보험사기 근절(7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8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7월)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12월)
	금융혁신위원회 출범(9월~)		불법차명거래금지 (11월)
	IT·금융 융합협의체 출범(11월)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2월)	상호금융 가계부채 대응방안(12월)

	실물지원 및 금융업경쟁력제고	금융소비자 서민지원	금융시스템 안정
'15. 上	금융개혁 추진방향(3월)		
	금융규제민원 포털 오픈(3.31)		안심전환대출 (3.22)
	핀테크 지원협의체 출범(4.14)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3.31)
'15. 上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4월)		
	자본시장 개혁방안 (4.23)	퇴직연금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4.27)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5.6)		
	보험업 인가정책 개선(5.26)		
	기술금융 체계화 및 개도개선(6.8)	통합연금포털 오픈(6.11)	
'15. 下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6.18)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6.23)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6.19)
	중소·벤처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7.20)	계좌이동서비스 1단계 개시(7.1)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7.22)
	거대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7.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8.6)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7.31)
	은행·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8.13)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9.10)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10.14)	금융소비자 교육 강화 방안(10.15)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10.22)
	기은·산은 역할 강화 방안(11.2)	계좌이동서비스 2단계 개시(10.30)	건전성규제 선진화 방안 (10.29)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안(11.2)
	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구축(11.4)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12.10)
'15. 下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2.3)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방안(12.16)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2.14)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방안(12.21)	

실물지원 및
금융업경쟁력제고

금융소비자
서민지원

금융시스템
안정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2월)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방안(3.8)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1.2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시행(3.18)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3.31)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2.26)	기업구조조정 향후추진계획(4.26)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 개시(3.31)	찾아가는 금융신문고(3.9)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출시(3.14)	
중소기업 특화 금투회사 지정(4.15)	개인연금법 제정방향(5.30)	非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5.2)
보증기관의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5.23)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6.7)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5.11)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방안(6.14)	가계부채 향후 관리방향(5.26)
펀드상품 혁신방안(5.30)	보험다모아 기능 개선(6.27)	
회사채시장 개선 및 기업자금조달 지원방안(7.4)	제작통합관리 서비스 추진방안(7.4)	
신용평가지장 선진화방안(9.21)	사잇돌 중금리 대출 판매(7.5)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8.2)	월세입자 투자폴 조성방안(7.28)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8.1)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방안(8.29)	서민금융진흥원 설립(9.23)	가계부채 관리방안(8.25)
금융권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8.30)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9.26)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10.5)		
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11.7)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보고서(10.11)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11.10)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10.24)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지원강화(11.23)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금리상승 대응방안(11.24)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운영계획(11.24)	정책모기지 개편방안(12.8)	

참고 2

제1차 금융개혁 70개 실천과제 추진현황

추진단계: (16.12월) ● 제도개선완료 시행중(48) ○ 방안발표, 일부시행(17) △ 방안발표, 제도개선 중(4) √ 방안마련 중(1)

번호	과제명	추진실적	추진단계
1	감독·검사·제재 개선 (코치 → 심판)		
1-①	금융위·금감원간 역할 정립	실행방안 확정 ('15.7월)	●
1-②	컨설팅 검사 정착	'15.7월부터 지속 추진	●
1-③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	제재개혁 법안 국회제출 (11.30)	○
2	시장기능 존중 (금융소비자 보호 여건 성숙 전제)		
2-①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8.13)	●
2-②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오픈 (16.11.4)	●
2-③	금융교육 강화	강화방안 (10.15)	○
2-④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16.12.7)	○
3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3-①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점검반 출범 (3.26)	●
3-②	유권해석 및 No Action Letter 활성화	운영규칙 개정 (12.2)	●
3-③	금융규제민원포털 운영	포털 오픈 (3.31)	●
4	보수적 관행혁신		
4-①	은행 혁신성평가 개선	개선방안 (7.9)	●
4-②	20대 금융관행 개선	제2차 20대 과제 발표 완료(10월)	●
4-③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청약철회권 시행 ('16.11월~)	●
4-④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금융분야 유망서비스 발전방안(5.19)	○
5	금융사 자율책임 정착		
5-①	금융사고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8.13)	●
5-②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노력	△
5-③	금융 윤리규범 정립	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12.29)	●
5-④	금융의 날 제정	규정개정 완료(16.3.22)	●
5-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실태평가 시행 ('16.8월)	●
5-⑥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금감원 조직개편('16.2월)	●
6	창의적 금융 우대		
6-①	금융회사내 제재·면책시스템 점검·개선	제재시효 행정지도 완료 ('15.10월)	●
6-②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지속 추진	△
7	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질적성장 유도		
7-①	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시스템 개선	기술금융 개선방안 (6.8)	●
7-②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강화방안 (11.4)	●
7-③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강화방안 (10.30)	●
8	기술금융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		
8-①	기술금융대출 규모확대	기술금융 로드맵 (8.27)	●
8-②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 활성화	IP펀드조성(6.29)	●
9	기술금융 전문역량 확충		
9-①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역량 배양	전문 교육과정 실시 (8.18)	●
9-②	기술금융 평가 인프라 고도화	기술금융 개선방안 (6.8)	●
10	거래스 구조개혁		
10-①	코넥스 시장 활성화	활성화 방안 (4.23)	●
10-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활성화 방안 (4.23)	●
10-③	거래스시장간 경쟁 강화	경쟁력 강화방안 (7.2)	○
10-④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자증권법 제정 (3.22)	●
10-⑤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규제선진화 방안 (6.1)	●

번호	과제명	추진실적	추진단계
11	사모펀드·모험자본 획기적 육성		
11-①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강화방안 (4.23)	●
11-②	벤처투자 활성화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7.20)	○
11-③	크라우드 펀딩 도입	'16.1.25 시행	●
11-④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강화방안 (10.14)	●
11-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12.19)	●
12	국가자산·민간금융간 시너지 창출		
12-①	자산운용 협의채널 마련	연금자산관리방안(12.21)	△
12-②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연금자산관리방안(12.21)	△
13	핀테크 생태계 구축		
13-①	핀테크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협의체 출범 (4.14)	●
13-②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핀테크지원센터 개소 (3.30)	●
13-③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확립방안 발표 (6.19)	●
13-④	전자금융법령 정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6.3월)	●
13-⑤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	위탁규정 개정안 시행 (7.22)	●
1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4-①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마련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5.18)	●
14-②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도입방안 발표 (6.18)	●
15	빅데이터 활성화		
15-①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7.1)	●
15-②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한국신용정보원 출범('16.1.1)	●
16	금융규제 유형화·개선		
16-①	그림자규제 개선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9.18)	●
16-②	건전성규제 합리화	선진화 방안 (10.29)	○
16-③	영업행위 규제 개선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12.3)	○
16-④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12.16)	○
16-⑤	시장질서 규제 개선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12.10)	○
16-⑥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16.1.4 시행	●
17	칸막이 규제 완화		
17-①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방안 (7.3)	●
17-②	보험 판매채널 정비(온라인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오픈 (11.30)	●
17-③	보험업 진입·인가 기준 완화	인가정책 개선방향 (5.26)	●
17-④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5.12.30 시행	●
17-⑤	보험업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
17-⑥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16년중 추진	○
17-⑦	증권·보험 지급결제참여 확대	지속 검토	√
18	신상품·신영역 개척 지원		
18-①	금융세제 개선안 마련 (중장기 포함)	세제개편안 완료	●
18-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ISA 출시('16.3.14)	●
18-③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개시	서비스 개시 (10.30)	●
18-④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금융권 역량강화	활성화 지원방안 ('15.7.16)	○
18-⑤	해외 SOC 사업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해외SOC펀드 출범 ('15.8.17)	○
18-⑥	외환제도·규제 개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1.30)	●
18-⑦	100세시대 대비 상품개발	통합연금포털 오픈 완료('15.6.11)	●

참고 3 제2차 금융개혁 36개 실천과제 추진현황

추진단계: (16.12월) ● 제도개선완료 시행중(24) ○ 방안발표, 일부시행(6) △ 방안발표, 제도개선 중(3) √ 방안마련 중 (3)

번호	과제명	추진실적	추진단계
1	기술금융 확대·정착		
1-①	투자기반 기술금융 확대	투자용 기술평가 개시 (4.1)	●
1-②	기술신용대출 정착	기술금융 실적평가 체계 개선 (2.24)	●
1-③	맞춤형 컨설팅 강화	투자정보 마당 기능 개편 (4.5)	●
2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2-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 (11.7)	○
2-②	상장·공모제도 등 전면 개편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 (10.5)	●
2-③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M&A 중개망 개설·운영 (6.30)	●
3	정책금융 역할 강화		
3-①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정책금융 정례회 (4.26)	●
3-②	문화융성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 지원 방안 (2.26)	●
3-③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화 해소	MOU 체결 (5.27)	●
4	새로운 금융서비스 확대		
4-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12.14)	●
4-②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3단계 시행 (2.26)	●
4-③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가이드라인 개선 (12.9)	●
5	국민재산 증식		
5-①	금융자문업 활성화	테스트베드시행('16.9~'17.4월)	○
5-②	ISA·내집연금 등 새로운 상품 도입	ISA (3.14) 및 내집연금 (4.25) 출시	●
5-③	연금제도·금융세제 개선	개인연금법 입법예고 (11.8)	△
6	서민금융 지원 확대		
6-①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사잇돌대출 출시 (7.5)	●
6-②	채무조정제도 개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개시 (7.1)	●
6-③	서민금융지원 강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9.23)	●
7	소비자 보호 강화		
7-①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제2차 20대 과제 발표 완료(10월)	○
7-②	5대금융악 척결 등 금융사고 방지	'16년 과제 추진완료	●
7-③	금융소비자 역량 및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모범기준 개정(17.1)	●
8	핀테크 활성화		
8-①	핀테크 생태계 강화	규제개선(6.30) 및 오픈 API 구축(8.30)	●
8-②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해외데모데이 개최	●
8-③	빅데이터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11.15)	●

번호	과제명	추진실적	추진단계
9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9-①	보험규제 전면 개편	보험상품위원회 논의개시 (9월)	√
9-②	글로벌 IB출현 기반 마련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 (8.2)	△
9-③	금융회사-인프라 해외진출 지원	현장간담회 (5.24)	○
10	금융규제개혁		
10-①	그림자규제 근절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1.4)	●
10-②	업권간 칸막이 규제 개선	은행법 개정 추진중 (12월)	√
10-③	미래금융 대비 규제를 전환 추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 (12월)	√
11	감독당국 변화		
11-①	검사제재개혁 착근	제재개혁 법안 국회제출(11.30)	○
11-②	감독·검사 방식 선진화 지속	검사·제재 규정 개정 (3.15)	●
11-③	현장점검 강화	지역금융 발전방안 (9.29)	○
12	금융회사 변화		
12-①	성과중심문화 확산 유도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5월)	△
12-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법 시행 (8.1)	●
12-③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권역별 현황 점검 완료 (7월)	●

참고 4 현장점검반 활동 성과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80주차('16.12.30일)까지 1,31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5,677건의 건의사항 접수

○ 그중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3,419건*을 회신(수용률 48.4%)

* 수용 : 1,656건, 불수용 : 1,319건, 추가검토 : 444건

□ 권역별로 보험이 1,630건(28.7%)으로 가장 많고, 비은행이 1,625건 (28.6%), 금융투자 1,337건(23.6%), 은행지주 1,085건(19.1%) 순

(단위 : 건, %)

구 분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건 수	1,085	1,630	1,337	1,625	5,677
구성비	19.1	28.7	23.6	28.6	100

□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전체 수용률은 48.4%이며, 업권별로는 은행 56.4%, 보험 53.6%, 비은행 44.3%, 금융투자 42.9% 순

< 회신 결과 >

(단위 : 건, %)

구 분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수용	252(56.4)	583(53.6)	426(42.9)	395(44.3)	1,656(48.4)
불수용	155(34.7)	379(34.8)	369(37.2)	416(46.6)	1,319(38.6)
추가검토	40(8.9)	126(11.6)	197(19.9)	81(9.1)	444(13.0)
합 계	447(100)	1,088(100)	992(100)	892(100)	3,419(100)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건수는 총 1,910건으로, 특히 현장반 활동 개시 이후 총 1,095건*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

* '01~'14년중 접수된 비조치의견서 요청은 단 10건

(단위 : 건)

구 분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법령해석	151	211	257	196	815
비조치의견서	266	254	236	339	1,095
합 계	198	252	294	281	1,910

*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 제재 여부에 대해 일괄회신 조치한 885건 포함

Ⅱ. 2017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1. 2017년 금융정책 여건

2. 2017년 금융정책 방향

1. 2017년 금융정책 여건

1 대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

- 세계경제는 '08년위기 이후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금리상승과 强달러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
 - (실물)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 속에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전망
 - * 세계경제성장률(IMF, %) : ('00~'07 평균) 4.5 ('12~'15 평균) 3.4 ('16) 3.1 ('17*) 3.4 (17년 성장률 전망) 美 2.2, 中 6.2, 선진국 1.8, 신흥국 4.6
 - (금융) 금리상승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와 强달러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및 외환시장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
 - * 글로벌 펀드자금(美 대선후~16년말, 억달러) : 선진국 (주식)+633 (채권)△220 신흥국 (주식)△145 (채권)△147
- 美 新정부의 정책방향과 '16년부터 이어져온 美 금리인상 기조, 유럽·중국·신흥국 불안이 여전히 금융시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美 금리인상 속도) 美 新정부의 정책 구체화와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하고 시장 불안이 확대될 소지
 - * 16.12월 FOMC : 기준금리 인상(25bp) & '17년 3회 인상 전망(점도표 중위값)
 - ** 美 10년 만기 국채금리(%) : (15년말) 2.27 (16.11.8) 1.85 (16년말) 2.44
 - (유럽) 브렉시트 진행과정, ECB의 통화정책 방향, 이탈리아 은행부실 등 불안요인 지속
 - (중국) 통상환경 악화, 부동산시장 위축,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및 외화보유액 감소*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 * 중국 외화보유액(조달러) : (15.12월) 3.33 (6월) 3.21 (8월) 3.17 (10월) 3.12 (11월) 3.05
 -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 强달러에 따른 자금유출 및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신흥국 금융불안이 심화될 가능성
 - * 美 대선 이후 신흥국의 달러 대비 환율 변화율(16.11.8~12.30, %) : (터키) +11.5 (멕시코) +13.1 (남아공) +4.1 (인도네시아) +3.7 (말레이시아) +7.5

2 국내 여건 및 리스크 요인

<국내 여건>

- (거시경제) '17년 국내경제는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내수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
 - * 韓 성장률 전망 : (IMF) 3.0% (OECD) 2.6% (한국은행) 2.8% (기재부) 2.6%
- (내수) 유가상승, 내구재 소비둔화, 주택시장 활력 약화 등으로 **소비·건설투자 중심으로 둔화** 예상
 - * 내구재 판매(전년동기비,%) : (15년) 10.2 (16.上) 8.4 (3Q) 1.3 (10월) 0.7 (11월) 1.8
 - * 국내건설수주액(전년동기비,%) : (15.3Q)50.4 (4Q)40.1 (16.1Q)13.8 (2Q)△6.3 (3Q)2.7
- (수출) 유가 회복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되나 **중국 성장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
 - * 수출증가율(통관)(전년동기비,%) : (14년)2.3 (15년)△8.0 (16년)△5.9
- (금융시장)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요인보다는 **美 금리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해 외환·채권시장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환율) 달러화 강세 속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속될 우려
 - * 달러인덱스 변화율(%) : (16년중) +3.6 (美 대선후~16년말) +4.4
 - * 원/달러 환율 변화율(%) : (16년중) +3.0 (美 대선후~16년말) +6.4
 - (금리) 美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로 **美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국내금리가 이에 동조화되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
 - * 국고 3년 금리(%) : (15년말) 1.662 (16.11.8) 1.425 (16년말) 1.638
 - 10년 금리(%) : (15년말) 2.076 (16.11.8) 1.702 (16년말) 2.074
 - 美 기준금리 인상후 국내 국채금리는 美 국채금리 대비 소폭 상승(3년물) 또는 하락(5년, 10년물)하며 **내외금리차가 축소**
 - * 韓국채금리-美국채금리 차이(bp) : [美대선전] (1y)+78 (3y)+41 (5y)+19 (10y)△15 [16.12.30] (1y)+76 (3y)+19 (5y)△13 (10y)△37
 - (주가) 외국인 자금 유입* 속에 주가가 아직은 **양호한 흐름**이나,
 - *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입(조원) : (美 대선후~16년말) +1.6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시장불안으로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출세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 (금융산업) 최근 금리상승으로 **채권평가손이** 발생하여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

- 금리상승시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채권평가손이** 발생하여 이익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 은행의 순이자마진 증대, 보험사의 이차역마진 해소 등으로 **이익구조 개선이** 가능한 측면도 존재
- 한편, 그간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금융회사 자본비율이 지속 개선되는** 등 양호한 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경우 **감내 가능한 것으로** 평가

< 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 >

	15.4분기(A)	16.1분기	16.2분기	16.3분기(B)	B-A(%p)
은행 BIS 비율	13.9	14.0	14.4	14.8	+0.9
생보 RBC 비율	278.3	284.7	297.1	300.5	+22.2
손보 RBC 비율	244.4	251.4	269.1	280.8	+36.4
증권사 NCR 비율*	-	528.7	547.5	571.8	+43.1**
저축은행 BIS 비율	14.1	14.2	14.5	14.7	+0.6

* 16년부터 新NCR 기준 전면시행 ** 16.3분기와 16.1분기 값의 차이

- (기업자금시장) 기업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우려
 - 중소기업 위주로 은행의 기업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
 - * 은행기업대출(1~11월중 증감, 조원) : (12~14년 평균)48.7 (15년)58.2 (16년)35.8
 - 대기업 : (12~14년 평균)21.0 (15년) 1.1 (16년)△0.5
 - 중소기업 : (12~14년 평균)27.8 (15년) 57.0 (16년)36.3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태도가 강화***되고 **가산금리가** 시장 금리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자금조달 비용이 증대될** 가능성
 - * 은행대출태도지수(강화<0<완화) : (15.2Q)+9 (15.4Q)△3 (16.2Q)△19 (16.4Q)△17
 - ** 16.11월중 중기(신용대출) 가산금리 변화 : 연초대비 +29bp, 6월대비 +20bp
 - 금리상승과 불확실성 증대로 **양극화가 확대***되어 **非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질 소지
 - * 신용스프레드(% , AA-와 A+ 등급간) : (15년말) 40.6 (16.11.8) 63.7 (16.12.30) 66.2

〈리스크 요인〉

□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세 속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금리상승 등에 따라 대외불안이 대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

○ (가계부채) 8.25대책의 효과, 금리 상승세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른 수준

*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 (14년)+38.6 (15년)+78.2 (16년)+68.8

-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금리상승에 대응하여 한계·취약차주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

* 非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 (14년)+25.1 (15년)+29.2 (16.1~11월)+45.0

○ (기업 자금조달)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필요

* 한계기업[3년연속 이자보상비율>1] 비중('10년→'15년, %) :
(전체) 11.4→14.7, (해운) 8.8 → 18.6 (조선) 6.2 → 14.7 (철강) 4.6 → 12.3

○ (금융시장 불안) 美 금리인상 등으로 내외금리차 축소, 글로벌 시장 불안 확대시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

* 外人 주식자금 순유입(조원) : (16년중)+12.1 (美 대선후~16년말)+1.6
外人 채권자금 순유입(조원) : (16년중)△12.6 (美 대선후~16년말)△2.3

- 美 금리 동조화로 국내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국채·회사채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 회사채 시장의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 국채·회사채(A+) 신용스프레드(%) : (15년말) 98 (16.11.8) 114 (16.12.30) 115

** 회사채 순발행 규모(억원) : (16.7월)+292 (9월)△6,431 (11월)△13,584 (12월)△7,091

○ (취약계층 애로) 금융접근성 감소, 금융비용 증가로 상환능력이 낮은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증대될 가능성

➡ 대내외 불안요인이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등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참 고

2016년 주요정책 對 국민 서베이 결과

◆ '17년도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일반국민(1,000명) 및 전문가 집단(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KSOI, '16.12월)

* 설문 설계 : 금융개혁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 반기별로 정기적인 서베이 실시중('15.12월, '16.8월, '16.12월)

1 금융개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인지도) 일반인·전문가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인지

* 금융개혁과제 8개 중 4개 이상 인지 : 일반인 54.1%, 전문가 100.0%

○ 일반인의 경우 '16.8월 서베이 결과(65.9%)에 비해 세부 개혁 과제에 대한 인지도가 하락

* '16.8월 서베이 결과, 일반인 중 4개 이상의 금융개혁과제를 인지한 비중이 당초 97.4% 였으나, 설문 수행기관인 한국갤럽에서 데이터 처리상 오류로 인해 잘못 산정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65.9%로 정정

< 설문 대상 금융개혁과제 8개 >

'16.8월 설문	'16.12월 설문
계좌이동서비스, 클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ISA, 내집연금 3종세트, 성과연봉제, 간편결제·간편송금, 로보어드바이저	계좌이동서비스, 클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ISA, 기술금융, 핀테크, 보험 다모아, 비대면 계좌개설

□ (금융당국의 노력) 일반인의 평가는 '15년보다 상승(41.8점 → 41.9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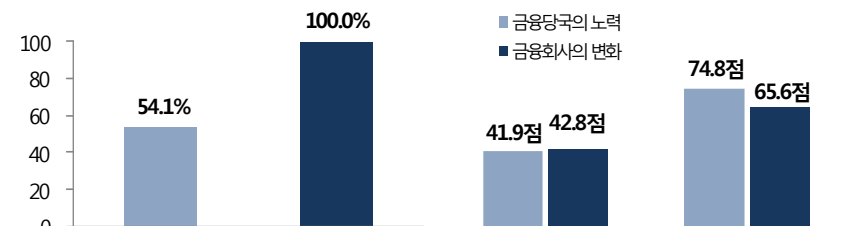
○ 전문가의 평가는 '15년 서베이 보다 다소 하락(79.9점 → 74.75점)

□ (금융회사의 변화)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더 높게 평가한 반면, 일반 국민은 금융회사의 변화를 조금 더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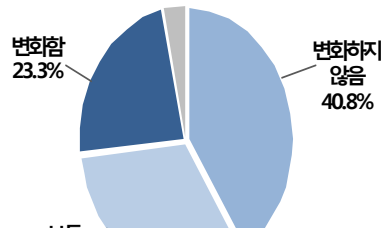
○ 특히, 일반 국민은 '15년 서베이 보다 금융회사의 변화 노력을 높게 평가('그렇다' 이상 18.3% → 23.3%)

<금융개혁과제 4개 이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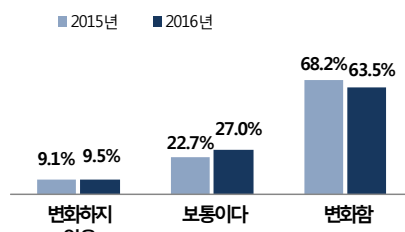
<금융당국 노력 및 금융회사 변화>



<금융회사 변화 - 일반인>



<금융회사 변화 - 전문가>



□ (전반적 금융인식) 금융 서비스 품질개선, 신뢰도, 편의성 등에 대해 전문가(60~70점)는 일반인(30~50점)보다 높게 평가

○ '15년과 비교해서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금융회사 서비스 품질 향상도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 전문가 모두 상승

- 다만, 일반 국민은 '15년 서베이 보다 금융회사 서비스 신뢰성 및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낮게 평가

□ (만족도) 전문가는 '15년 금융개혁 서베이 결과(63.6%)와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60.5%)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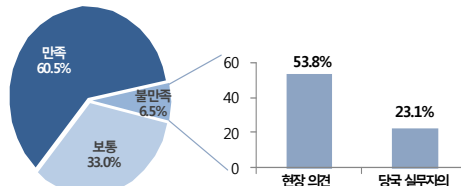
○ '15년 서베이와 동일하게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30.5%)를 주요 만족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신(23.5%)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짐

* '15년 서베이 만족도 :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40.1%), 현장중심의 개혁(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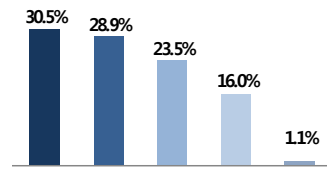
○ 금융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일부 전문가는 '현장의견 수렴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

* '15년 서베이 불만족 주요 요인 : 금융당국 실무자의 바뀌지 않는 태도(41.7%)

<금융개혁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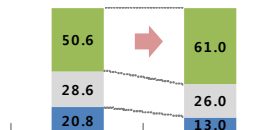
<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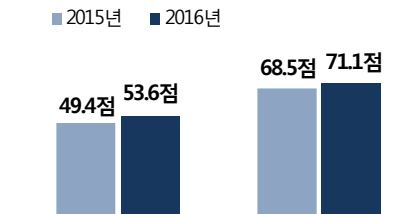
○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능 확립 여부는 '15년 조사보다 높게 평가됨

('그렇다' 이상 답변 50.6% →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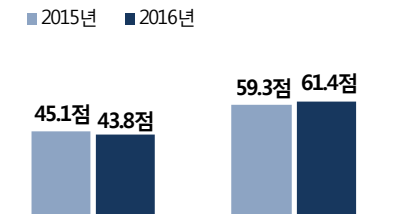
* '그렇다' 이상(%) : (금융회사) 74.3, (금융협회) 81.8
<-> (학계) 40.0, (일반회사)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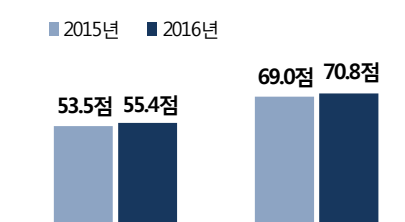
<금융회사 서비스 품질 향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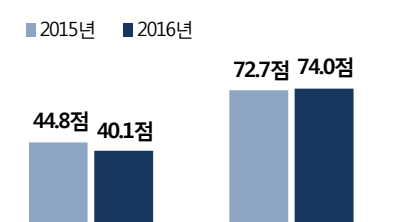
<금융회사 서비스 신뢰성>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정도>



➡ 향후 금융개혁은 금융회사의 서비스 신뢰성 제고 및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

2 2017년 추진과제 (전문가 대상)

□ 중점 추진과제

- 금융권 정책고객(금융사·협회 등)과 비금융권 정책고객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으로 선정
- 금융업권은 여전히 금융규제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순위	중점 추진과제	응답률(%)	응답률(%)	
			금융업권	비금융업권
1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 금융안정	45.0	41.0	50.6
2	금융규제개혁	17.5	23.9	8.4
3	금융/IT 융합 등 핀테크 활성화	11.0	13.7	7.2
4	기업구조조정	9.5	6.8	13.3
5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7.0	4.3	10.8

□ 주요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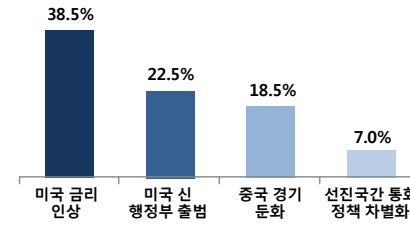
- (대외) 미국 금리 인상,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둔화 등
- (대내) 가계부채 위험 증가, 취약업종 기업부실 확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 정책 목표별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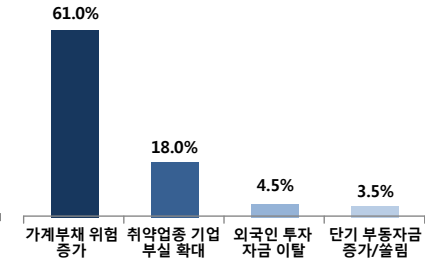
- (금융 안정) 가계부채 관리 → 금융시장 안정 → 올바른 지배 구조 정착 → 기업구조조정 順
- (경쟁과 혁신) 금융규제개혁 → 금융당국의 변화 → 핀테크 활성화 → 해외진출 활성화 順
- (기업과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 → 정책금융 역할강화 → 서민 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 금융사기/범죄 근절 順

【 주요 과제별 설문조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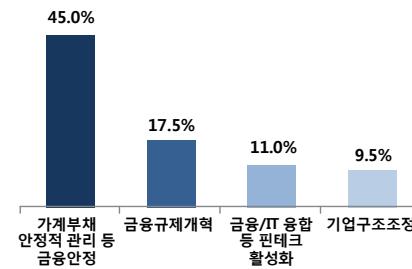
<대외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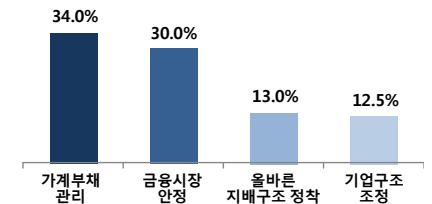
<대내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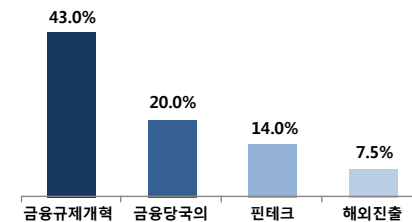
<17년 중점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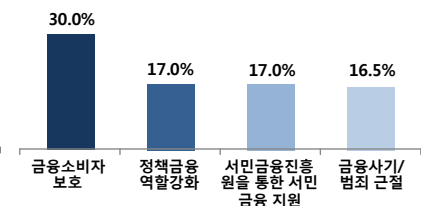
<정책 목표과제-튼튼한 금융>



<정책 목표과제-경쟁과 혁신>



<정책 목표과제-기업과 서민>



1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간담회

- ◆ 일시/장소 : '16.12.11(일) 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담당국장, 금융감독원장 등
 -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거래소 이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전협회장,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보안원장

- ☐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 일관된 원칙하에 가계·기업부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
- ☐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

2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 간담회

- ◆ 일시/장소 : '16.12.14(수) 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담당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기업은행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 은행연합회장, 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장

- ☐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할 필요

3 업권별 간담회

- ◆ 일시 : '16.12.13(화), '16.12.15(목)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중선위원,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등
 - 업권별(은행/보험/금융투자/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 ☐ 업권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 금융개혁을 멈추지 말고 추진하여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필요

2. 2017년 금융정책 방향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
- ➔ 「3대 추진전략 및 12개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

【 추진전략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

- 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
- 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 ③ 한계기업 구조조정
- 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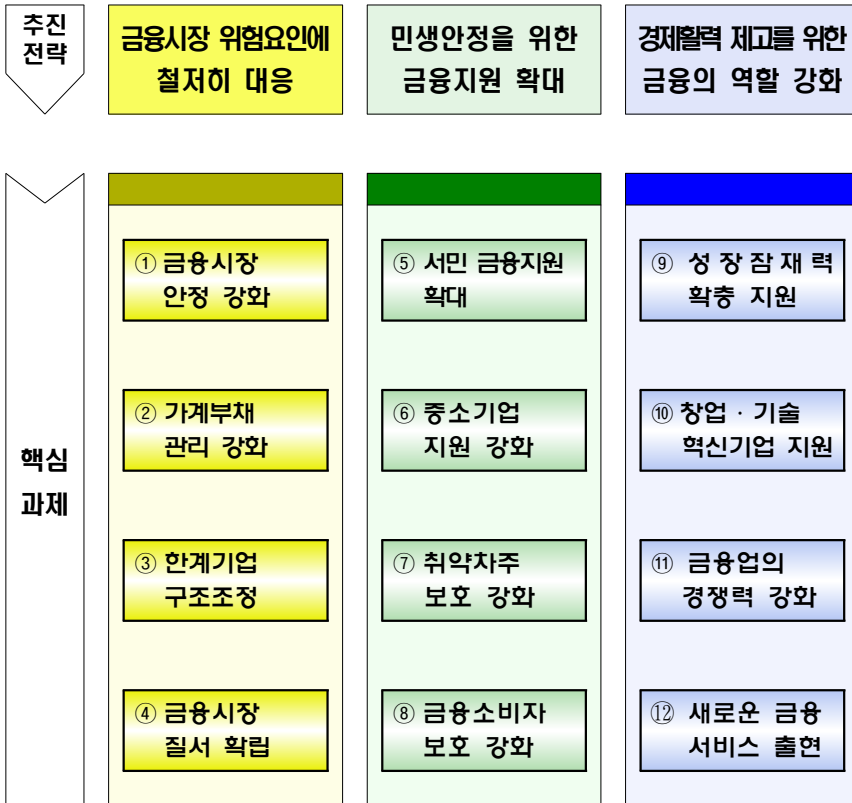
【 추진전략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 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
- 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
- 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
- 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추진전략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 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⑩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 ⑪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 ⑫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현장 중심 실천과 점검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Ⅲ. 2017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 기본 방향 >

- ◆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
 -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산업의 안정성 제고
 -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
 -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금융시장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

■ [핵심과제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

- 가. 리스크 점검·대응체계 강화
- 나. 채권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철저 대비
- 다. 금융권 건전성·안정성 제고

■ [핵심과제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가. 선진형 여신심사 관행의 정착 및 DSR 활용방안 마련
- 나. 가계부채 취약부문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내실화
- 다.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 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점검 강화

■ [핵심과제③] 한계기업 구조조정

- 가. 일관된 원칙하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나.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

■ [핵심과제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

-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견제기능 제고
- 나.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
- 다.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핵심과제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

가 리스크 점검·대응체계 강화

- (위험점검체계 마련) 비상대응체계(금융위·금감원 및 협회·유관 기관 참여)를 통해 모든 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비상상황실 운영)
 - 금융시장, 서민금융, 기업금융, 금융산업 4개팀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일일 1회(필요시 수시) 보고
- * <점검예시>
 - ▶ (금융시장) 국내외 금융시장 특이동향 등
 - ▶ (기업금융) 기업자금사정, 중소기업 여신 동향 등
 - ▶ (서민금융) 채무불이행자 동향, 서민금융 지원현황 등
 - ▶ (금융산업) 헤지포지션 조정 등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 자본역력 등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기재부, 금감원, 한은 등 금융안정 유관 기관과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정례 협의 강화
- (스트레스 테스트) 엄격한 기준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충격 흡수역력 정밀 점검
 - *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주요 취약요인 등을 연1회 이상 점검
- 스트레스 테스트 상시화(금감원 내 전담팀 설치) → 점검결과에 따라 신속히 맞춤형 대책* 마련·시행
 - * 자본 확충, 유동성 확보, 부실자산 매각 등
- (시장과의 소통확대) 국내외 시장 전문가 Network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업권별 리스크 점검

나 채권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철저 대비

- (회사채 인수지원) 산은 등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최대 5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17.1분기 개시)
 - 중위험(BBB~A등급) 회사채 발행시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중위험 회사채 인수여력을 확대
 - * 미매각이 발생한 중견기업 발행 BBB~A등급 채권의 최대 30%를 산은에서 인수
- (회사채 유동화 보증) '17년 중 P-CBO를 1.6조원 지원(신보)
 - * 既 편입된 회사채의 경우 일시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부 상환 후 연장 지원 (약 1.3조원)하고, 우수혁신형 기업 신규 회사채 발행도 적극 지원(연간 최대 3천억원)
- (회사채시장 활성화) 유동화 증권 발행자 요건 완화(BBB→BB) 등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16.7월)」을 차질없이 이행
 - *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자 요건 완화('17.1분기)
 -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17.2분기) 등
- (채권시장 안정펀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재가동(필요시)
 - 채권시장 불안 확대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 완료('16년말)

<참고> 채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방안(예시)

① (규모) 84개 금융회사와 기체결한 매입약정에 기반하여 Capital Call 방식으로 최대 10조원까지 운영 → 필요시 확대

② (투자대상) 시장상황에 따라 은행채, 회사채, 여전채, P-CBO, 국공채 등을 조합

③ (가동요건) 금리상승폭 확대, 신용스프레드 확대, 유동성 경색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요인별로 임계 수준을 넘어갈 경우 가동
- (재정·통화당국과 협력) 재정, 금융, 통화당국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

다 금융권 건전성·안정성 제고

- (글로벌 건전성 규제 도입) 바젤Ⅲ 등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에 따른 금융권 영향 분석 및 관련 제도 정비
 - 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화 익스포저 규제***를 차질없이 도입('17.4분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8년 시행)
 - * NSFR = 은행이 만기 1년이상 운용 예정인 자산규모만큼 만기 1년이상 안정적 유지가 가능한 자금조달액 보유 의무화
 - ** 레버리지비율 규제 = 은행의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3%이상 유지 의무화
 - *** 유동화익스포저 규제 =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시 외부신용 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및 전반적인 위험가중치 상향
 - IFRS4 2단계 도입('17.1 기준서 확정 → '21년 시행 예정)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연착륙 방안* 마련
 - * 부채증가에 대비 현행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정비, IFRS4 2단계에 부합하는 신규급여력제도(RBC) 도입방안 검토 등('17.3분기 감독규정·세칙 개정)
- (외화유동성 제고) 대외 충격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 대외 불안시 급격한 외화유출에 따른 신용경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LCR* 규제 도입('17.1.1일 시행)
 - * 외화 LCR = $\frac{\text{고유동 외화자산}}{\text{향후 1개월간 외화 순현금유출(유출·유입)}}$ (바젤Ⅲ 권고사항으로,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상황 측정)
- (유동성 위험관리 강화)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 모니터링·공시 강화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단기금융거래 정보가 일별로 보고·공시되는 법적체계 정비('17.6월까지 국회제출)
 - *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이 거래 정보를 일별로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신용등급·거래특성별로 세분화된 거래정보를 충분히 시장에 공시
 - 기일물(2일 이상) RP거래 활성화를 통해 증권사 등의 단기 차환리스크를 완화하고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매년 3분기)

□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

-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충당금 적립률 강화(17.1분기)
-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17.1분기) 및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한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 도모
- (여전사) 카드대출 현황 및 증가원인, 카드대출 금리체계·운용 등에 대해 점검하고(17.1분기),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 (보험업) 금리상승에 따른 RBC 하락에 대비하여 필요시 자본 확충 등 보험사 자체 대응방안 마련 적극 유도
- (증권사) 우발채무에 대해 대손충당금·준비금 적립기준*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강화(17.3월)

* 정상, 요주의로 분류되는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 등의 적립의무 부여

**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중 차입부채비율 등 난내항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표들에 우발채무 등 부외항목을 반영하여 평가

- 우발채무·구조화증권·해외투자자산 등의 리스크 요인과 금리 급변에 따른 채권 손실 가능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17.上)

□ (신규 감독체계)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감독체계 마련

- (P2P 대출 건전 관리)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P2P 대출 실태조사 정기화(반기 1회) 등 모니터링 강화(17.上)
- (금융전산 보안강화) 금융사 전산시스템의 취약점 상시 분석·점검 및 금융보안원-금융사 간 침해정보 공유체계 강화(17.2분기)

핵심과제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가 선진형 여신심사 관행의 정착 및 DSR 활용방안 마련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조금이라도 처음부터 나눠 갚음”으로써 「빚을 줄여나가는 구조」 형성

- 잔금대출(17.1.1이후 분양공고분), 상호금융·새마을금고(17.3월~) 등 소 금융부문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 (DSR 체제 구축)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 마련(17.1분기)

- (1단계)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표준모형 마련(17년)
 - DSR은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
 -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연구용역 추진)

* 여신심사에 DSR 반영시 고려요인, 반영 절차, 한도산정 방식 등 제시

- (2단계)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18년)
 -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은행권부터 우선 적용→타업권 단계별 도입)
 - 금융회사가 DSR 정보를 차주에 제공하여 상담자료로 활용(차주 스스로 상환계획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식도 개발·확산

- (3단계)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 정착(19년 이후)
 -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
 -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

* 예) DSR이 높은 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거나, DSR이 높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예 : 채무조정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등

□ (LTV·DTI 개선) 현행 LTV·DTI 규제가 담보능력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

○ DTI 소득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新 DTI” 도입)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자산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예) [현재]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총액만 고려 → [개선]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소득의 성격이 일시적(예 : 성과상여금 등)인 경우에는 상시 소득에 비해 일정부분 감면하여 적용

** 예) [현재] 자산의 소득창출능력 등을 직접 고려하지 않고 자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고려 → [개선]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득 창출능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 보다 높은 소득환산을 적용

< 참고 : DTI와 DSR 비교 >

- DTI와 DSR은 차주의 소득대비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산출방식·활용방안 등에서 차이
- (산출방식)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되나,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
 - ※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측면에서 DSR이 DTI보다 우월
- (활용) DTI는 대출심사시 한도규제(수도권 60%)로 활용되고 있으나, DSR은 금융회사 내부여신관리 절차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

< DTI와 DSR 비교 >

	DTI	DSR
명칭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총채적상환능력비율 (Debt Service Ratio)
산정방식	$\frac{\text{(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상환액)}}{\text{연간 소득}}$	$\frac{\text{(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원리금상환액)}}{\text{연간 소득}}$
활용방식	대출심사시 획일적인 규제비율(60%)로 활용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중

나 가계부채 취약부문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내실화

(1) 서민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개편

□ (요건정비) 정책모기지 상품별 차별화된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요건 정비(‘17.1.1)

< 정책모기지 상품별 요건 정비 방향 >

맞춤형 정책모기지 상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정책 대상	저소득층 & 중산층 (중위소득 150% 미만)		일반 국민
정책 목표 (요건정비방향)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차질없이 공급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	고정금리·분할 상환 가속화

○ (서민층에 집중) 주택가격 요건 강화(디딤돌·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신설(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접근가능성 제고

*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6→5억원,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年7천만원 신설, 주택가격 9→6억원, 대출한도 5→3억원

○ (실수요자 지원 강화)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 요건(3년내 처분) 개선을 통해 투기적 목적의 대출수요 억제

* 대출약정시 고객이 처분기한을 선택하되, 미준수시 연차별 가산금리 부과

□ (공급규모 확대·비중변경)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41→44조원)하고, 금리상승기에 대비하여 순수고정금리대출 확대 추진

○ (공급규모 확대) 보금자리론(‘16년 14.5조원 → ‘17년 15조원), 적격대출(‘16년 18.0조원 → ‘17년 21.0조원) 등 저리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확대

* 디딤돌대출은 ‘16년 수준인 약 8조원 유지

○ (순수고정형 적격대출)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現 비중 50% → 매년 +15%p)

(2) 전세자금·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출시

- **(전세대출)** 주신보 전세보증 공급목표를 상향('16년 18.5조원 → '17년 20조원)하고,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상품 출시('17.1월중)
 - *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를 인하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효과 발생 전까지 자발적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 출시('17~'18년, 2년간)
 - (대상) 신규분양 주택을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는 입주예정자
 - (요건)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하여 DTI 요건을 완화 적용
(기존 보금자리론 60% → 신상품 80%)
 - (대출내용 등) 만기 10~30년, 고정금리, 비거치·분할상환
(금리수준 등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

(3) 책임한정(비소구형) 주담대 시범사업

- **(책임한정형 주담대 공급)**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의 경우 차주가 원하는 경우 책임한정형으로 공급('17.上)
 - * 채무자 책임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가액으로 한정, 그 외 재산의 소구권 제한
 - 지원대상은 주택도시기금과 동일하게 저소득층부터 시행하되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대상범위 확대 추진
 - ※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은행에도 단계적 확산 검토

(4) 고령층 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내집연금 개선

-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한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17.1분기)
 - (현행) 배우자의 주담대가 있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곤란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 (등기비용 등 부담 발생) → 배우자 주담대 상환후 주택연금 가입
 - (개선)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 변경 없이 배우자의 주담대도 상환한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 ➡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상이한 약 8,600가구 혜택 예상
- 기존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 축소되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회복하도록 개선('17.4분기)
 - (현행) 여유자금의 생겨서 과거에 일시 인출했던 금액을 갚아도 축소되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당초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음
 - (개선) 기존 일시 인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면 축소되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회복
 - * <사례 : 72세, 3억원 주택 소유, 주택연금 가입당시 5,000만원 일시인출>
(현행) 현재 월 지급금 75만원, 일시인출금을 갚아도 월 지급금은 75만원 유지
(개선) 일시인출금 5,0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105만원으로 상승
 - ➡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의 약 3,800가구(11% 수준) 혜택 예상
-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도 가입 가능토록 추진(연내 개정안 제출)
 -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현행 근저당권 방식으로는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비용이 과다
 - 주택 소유권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해야 함에 따라 비용이 소요되고, 자녀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 (개선)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
 -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시점에서 결정 가능

다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 (미시분석)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분석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유형별* 정교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17.上)

- * 예) ①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 ② 일정 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 '기업형 자영업자')
- ③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개인사업자(→ '투자형 자영업자') 등

□ (정책금융) 생계형 자영업자(→ 서민금융) 및 기업형 자영업자(→ 정책금융기관)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

○ (생계형 자영업자) 미소금융* 공급 확대('16년 0.5→ '17년 0.6조원) 등을 통해 '창업·영업자금' 지원

*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이하 → 6등급이하로 확대

-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확대('17.2분기, 지원한도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 미소금융)
-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사업확장 등에 활용 가능)을 지원하는 '미소드림 적금'('15.2월~)' 공급 지속

* 예)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예금 적립시 서민금융진흥원이 1:1 매칭하여 저축 지원

○ (기업형 자영업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공급 확대('16년 11조원 → '17년 12조원)

- 점포 방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비대면) 대출상품*' 지원('17.1월)

* 기업은행, '17년 소상공인 운전자금으로 3,000억원 대출(금리 0.5%p 감면)

○ (중기청 정책자금 연계)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이 자체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중기청 정책자금* 알선도 강화

* 소상공인 등 대상 약 1.6조원 융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및 8.8조원 보증(신용보증재단중앙회·16개 지역재단) 공급 계획('17년중)

□ (컨설팅 강화) 창업 정보와 준비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 위주로 자금지원과 함께 사업컨설팅을 제공

○ (컨설팅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 제공지역 등을 확대('17.4월)

* [현행] 수도권만 시행 / 자금지원 이전 단계에서만 컨설팅 중
→ [확대] 4대 광역시→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 자금지원 후에도 컨설팅

○ (유관기관 협업)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간에 '자영업자 대상 컨설턴트 pool'을 공유·공동 활용('17.1분기)

○ (컨설팅 질 제고) 서민금융진흥원,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정보 공유방안 마련('17.1분기)

* 예)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지역정보(과밀업종) 등을 통해 자영업 창업 준비자에게 과밀지역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다른 지역 또는 업종 권고 등

□ (재기 지원) 현행 운영중인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설('17.3분기 시행 목표)

* (중기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재창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 신복위에서 중소기업 연체채무를 감면 →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신보, 기보에서 각각 25%씩 보증하는 제도로 현재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기 포함

○ (취업 연계) 사업을 정리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중기청 등이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적극 알선(연중)

*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정리 관련 세무 등 컨설팅, 재기교육 등 지원

□ (리스크관리 강화) 자영업자 대출이 과당경쟁 우려 업종·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체계 정교화('17년)

○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예: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강구('17.上)

○ 부동산 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예)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중 3년이상 대출에 대해 부분 분할상환 도입(매년 원금의 1/30 이상 상환 등)

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점검 강화

□ (모니터링 강화) 업권별·금융회사별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현재 주1회 개최 원칙으로 운영중인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 특별점검TF를 지속 가동
- 현행 일별(은행), 격주별(상호금융), 월별(저축은행, 여전, 보험) 점검체계의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최소한 격주 단위로 금융회사별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정비

- 가계대출 금리 산정체계 점검('16.12월) 결과를 바탕으로 금리 산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가산금리 산정 및 공시체계 개선 방안 마련

□ (특별점검 연장 실시) '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계대출 특별 점검을 연장 실시

- '17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대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빨라 리스크 관리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실시
- 최근 가계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상호금융 조합에 대해서는 중점검사 대상으로 특별검사 실시

□ (스트레스테스트)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금리상승이 주 업권, 차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 분석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활용

* 선제적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 채무불이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핵심과제③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 일관된 원칙하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경기민감업종)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적극 추진

- 조선·해운업은 적극적 자구노력 등 기 확립된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노력도 병행
-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정밀분석 등을 통한 잠재리스크를 점검(4월)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방안도 마련

□ (상시구조조정)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및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제적 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 추진

※ '16년중 대기업(32개), 중소기업(176개사)를 선정하고 구조조정 추진중

-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취약계열을 선정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으로 적극 관리하고,

- 소속기업체 평가를 통해 취약 계열사도 구조조정

-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新机촉법에 따른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금감원)하고, 미흡사항 개선 추진

- 매분기별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공개

- 구조조정 협력업체 금융지원 현장반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지원 상담 실시

-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프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천→5천억원)하고 대기업도 지원

□ (공급과잉업종)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통해 공급과잉업종내 기업의 M&A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나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

- (기촉법 개선) 기촉법 일몰(18.6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동법 상시화 검토·추진
- (회생절차 효과성 제고)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 활성화 지원
 - * (예시) 채권단이 사전계획안 제출(신규자금지원 방안 포함) → 법원은 사전계획안 인가 즉시 회생절차를 종결 → 채권단은 해당 구조조정 건을 워크아웃으로 전환
 - 관계기관 합동 TF('17.1월~, 법원·국책은행 등)에 적극 참여하고, Pre-Packaged Plan 도입을 위한 **관계규정**(법원 준칙 등) 개정도 지원
-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활성화
 -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 마련* →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 * 금감원, 신평사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17.1)하고 금감원이 은행별 평가모형을 점검('17.7)
 -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 → 구조조정채권 매각 지연 문제 해소**
 - * 채권은행 및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산업 전문가, 법정 관리인 등) 위주로 구성된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
 - ** 채권은행이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
 - 정책금융기관 보증 등을 통해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한 은행의 한도성 여신* 공급 유도 → 원활한 자금 지원 촉진
 -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등
 -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
 - *母子형 펀드(Fund of Funds)로 설계하여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펀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자펀드의 운용사로 선정하여 구조조정 추진
- ➔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금융연 주관, '17.2월)를 통해 의견수렴 후,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17.3월)

핵심과제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견제기능 제고

- (회계) 감사인 선임에서 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전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17.1월 발표)
 - (선임)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임제도 개편
 -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행 자유수임제**를 대폭 보완
 -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점검 후 부실한 경우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
 - (회계감사) 감사품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는 감사환경 조성
 - 감사중인 회사에 대해 금지되는 비감사용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
 - *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 적정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한공회 자율규제) 제시
 - 수주산업에 既도입중인 '핵심감사제'(KAM)를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감독·제재) 회계부정에 대한 사전·사후적 감독 및 제재 강화
 - 전체 상장법인에 대해 현행 회계감리 주기(약 25년)를 10년 이내로 단축하여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 철저히 감리
 - 회계부정 사범 형사책임 부과 및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실효성 제고
 - * 예) (현행) 5~7년 징역 또는 5~7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10년 이하 징역(일정액 이상 가중처벌 + 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필요적 병과

□ (신용평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신평사의 독립성 제고

○ 민간금융회사(약 105개사)의 자체신용도*를 ‘17년부터, 일반기업(약 320여개사)은 ‘18년**부터 공개

* 모기업·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

** 단, ‘18년 이후 시행이 예정된 일반기업이 자체신용도 공개를 원하는 경우 ‘17년부터 신평사와 협의 하에 자율시행 가능

○ 신평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발행사가 아닌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의 의뢰에 의한 신용평가 허용(‘17.4월)

- 발행사가 희망할 경우 금감원이 발행사 대신 신평사를 선정 하는 “신평사 선정신청제”를 시행(‘17.下)

○ 불건전 영업·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조정* 하고, 부실평가 손해배상 책임**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효적으로 활용

** 부실평가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신평사의 손해배상 책임 명시

○ 민간위원으로 구성(‘16.12월)된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평사 신규 진입 허용 여부와 관련한 시장 여건을 매년 점검·평가

□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17.2월)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등 적극 제공

○ 금융업권별 설명회, 스튜어드십코드 선도 참여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코드 도입 초기의 관련 업계 확산을 지원

나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

□ (공매도·불공정거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하는 한편, 정치 상황에 편승한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차단

○ 공매도 거래자의 증자참여 제한(1분기 법안제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17.3월)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시장질서확립 T/F(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16.12월 구성)를 통해 테마주 등 단기 이상급등·이상매매 종목에 대한 대응 강화(‘17.3분기)

- 사이버 루머 유포 및 정치일정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과징금) 적극 적용

○ 모바일 포렌식* 도입으로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분석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효과 개선(‘17.上)

*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와 기술을 통칭

- 자본시장조사단에서 포렌식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모바일 포렌식팀” 운영 예정

□ (공시제도) 자율공시 중 기술·특허 관련 중요정보*를 의무공시로 전환(1월)하고, 기타 중요항목도 검토·발굴하여 의무공시로 전환

*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등

○ 거래소 공시를 통해 중요정보가 누락 없이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여부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제공 확대(‘17.2분기)

□ (기업가치 평가기준 재검토) 합병,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 시장법령상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합리성을 전면 검토(‘17.下)

* (합병) 기업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 1주, 최근일의 주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유상증자) 청약일 전 3~5거래일 주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유사투자자문업)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신고요건 신설, 폐업후 편법적 영업금지, 미신고 영업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17.2월)

○ 파급력이 높은 방송매체 출연자에 대한 상시검증* 등 감독 강화

* 예: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송출연 제한(금융당국·방송사 MOU)

다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고 건수 위주의 업무관행을 개선(‘17.上)
 - * 금융회사 업무평가시 보고 건수 가점제 폐지, 우수사례 교육 강화 등
 - 수년간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 자금세탁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감독 효율화(연간)
 - 다국적 금융회사 및 해외지점*에 대한 현지당국의 제재 확대 추세를 감안,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감독을 강화(연간)
 - * 美 금융당국은 기업은행(‘16.2월), 농협(‘17.1월) 등에 이행약정 등 제재 조치
 - 자금세탁 방지 부문 민간자격제도 도입,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이 분야의 전문가 육성 기반 마련(‘17.上)
 - 자금의 실소유주 확인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집 배포, 저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선업무 효율화(‘17.上)
 - 의무 위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전제재를 확대하고, 업권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을 통해 검사수탁기관의 역할 강화(연간)
- (심사분석 품질 제고) 축적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
 -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시스템 종합진단 및 시범사업 추진(‘17.4분기)
 -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외화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분석 실시(‘17.下)
 - * 외화환거래법 개정으로 ‘17.6월부터 영업 허용
 -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방안 마련(‘17.下)
 - * 규제대상 업역, 관리감독주체, 의무부과 범위 등에 대한 사전 연구 필요

- (국제기준에 따른 제도 정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 제도를 선진화
 -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분야 특정직(6개 업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마련(‘17.上)
 - *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 부과대상 업무범위를 한정
 - 지하경제 증가,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해 국가적 차원에서 고위험 분야를 선별하고 대응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17.下)
 - * 금년 중 관계 부처 대책위원회(장차관급) 및 실무추진단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위험평가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 ※ 상기 두 가지는 2019.2월부터 실시되는 FATF 제4차 상호평가의 핵심 과제
- (국제협력·공조 강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의장국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무대 참여와 국가간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
 - * OECD 회원국 중심 37개 국가 및 지역기구가 정회원으로 가입
 - FATF(운영위원) 및 APG(북아시아 대표 운영위원) 활동, 개도국에 대한 FIU시스템 수출 등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 강화(연간)
 - FATF 교육연구원(TREIN)* 운영 활성화(연간)
 - * ‘16.9월 부산에 설립·개원한 FATF 최초의 산하 교육·연구기구
 - 금융정보교환 MOU 체결 등을 통해 역외탈세 등 국경간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연간)
 - * FIU 설립 이래 전세계 63개국과 MOU 체결(아시아 25개, 미주 13개, 유럽 21개 등) → 중동, 남미 국가와 MOU 체결 확대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기본 방향 〉

-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
-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강화
- 시장금리 상승 등에 취약한 차주의 보호 강화
-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핵심과제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

- 가. 촘촘하고 견고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나.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다.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관행 개선
- 라.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편

■ [핵심과제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가.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나.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강화
- 다.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舊Fast Track) 신설

■ [핵심과제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

- 가.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 나. 채권추심 관리 개선 등 채무자 보호 강화
- 다. 채무조정 활성화 등 한계차주 지원 강화

■ [핵심과제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비
- 나. 금융사고·금융사기 근절
-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업무 체계 개선

핵심과제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

가 촘촘하고 견고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정책자금 공급 확대) 지원대상·한도 확대 등을 통해 4대 정책 서민자금 공급을 연 5.7조원(55만명)→7조원*(67만명)으로 대폭 확대

* (햇살론) 연 2.5조원→연 3조원, (새희망홀씨) 연 2.5조원→연 3조원,
(미소금융) 연 0.5조원→연 0.6조원, (바꿔드림론) 연 0.2조원→연 0.4조원

- (지원대상 확대) 소득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 서민금융 지원의 포용성 제고

-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17.2분기)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3.5천만원 이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4.5천만원 이하

- (지원한도 상향) 햇살론·새희망홀씨 생계자금 한도를 확대 조정하여,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 지원('17.2분기)

* (새희망홀씨) 2.5→3천만원, (햇살론) 1.5→2천만원

- (사각지대 해소) 저신용 장애인에게만 제공하던 미소금융의 저리 생계자금(금리 4.5% 이하)을 저신용 취약계층에도 지원('17.2분기)

*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새터민 등

-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17.2분기)

* 예) 한부모가정(→학자금 대출), 새터민(→추가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등 지원 대상별로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

□ **(중금리 대출 활성화) 사잇돌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 저변을 확대**

* 그간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등에 힘입어 금융회사 자체 중금리 대출 시장도 '16년 0.9조원(1~11월 공급) 규모로 성장(금융회사 자체 추정 기준)

-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를 1조원 추가 확대('17.下)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3년간 총 0.7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지원 지속

- 취급 금융회사를 은행·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검토

* 취급 저축은행 30개→38개로 확대('17.1월)

-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중금리대출 지원(‘17.1분기)

* 현재 정책서민자금(신복위 소액대출, 금리 2~4%)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대출(20% 이상) 이용이 불가피하여 금리공백 존재

□ **(신협 관계형금융 강화) 상호금융 본연의 취지에 맞게 조합의 자금운용을 ‘조합원 중금리 신용대출’ 중심으로 활성화**

- 신협 사잇돌 대출 출시(‘17.2분기 목표) 등을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 기반 강화

-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규제 개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17.1분기) 등 부동산 담보대출의 과도한 증가세 억제도 병행

□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재단) 사회공헌사업 수행을 위해 소멸포인트,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출연하여 기부재단 설립**

* '16.9.30 여전법 개정에 따라 여신협회는 '17.1월까지 재단 설립 추진 중 → 1분기 중 기부금 출연 완료(목표)

- 카드이용자와 중소·영세가맹점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 방안(‘17.1분기) 마련 및 사회공헌활동 수행

* 예) 카드이용자에 대해 연체금 감면 등 서민금융 지원, 영세·중소가맹점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카드결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보안성 강화 추진

나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재학시기) 대학생이 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 확대**(‘17.2분기)

- (생활자금)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 확대(예: 800만원→1,200만원)

- (임차보증금 대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 예) 지원한도 2,000만원 이내, 금리 4.5% 이하

- (신용교육) 청년·대학생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하여 무분별한 대출 및 채무연체 등을 사전에 방지

* 금감원·장학재단·진흥원·신복위 등과 협업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동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구직시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및 채무조정 개선**(‘17.下)

- (상환구조 개선) 최근 경기악화로 늘어난 재학·구직기간을 감안하여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기간(예: 4→6년) 및 상환기간(예: 5→7년) 연장

- (채무조정) 청년·대학생의 채무불이행 낙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약정이자율 인하 등) 마련

- 학자금채무(장학재단) 및 금융채무(신복위)에 대해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교육부 협의 필요)

*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시 장학재단 채무는 제외하고 진행

□ **(취업연계)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대학생 등에 대한 취업알선 지원**(예: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1년이상 성실상환자)

* 취업컨설팅 제공, 성실상환증명서 발급,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 중소기업 취업 후 일정기간(예: 1년 이상) 성실 근무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다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관행 개선

- **(금융이용 실태조사)** 전 금융권에 걸쳐 장애인의 금융이용 관련 금융상품·판매채널별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17.1분기)

< 장애인 금융이용차별 주요사례 >

- ① **(대출)** 뇌병변·시각 장애인(3급)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였으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금융회사에서 대출 거절
- ② **(카드발급)** 청각장애인 B씨는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상담원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
- ③ **(보험가입)**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는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거절

- **(금융상품 가입차별 개선)**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시 불합리한 거절관행 개선 및 금융권별 차별 개선방안 마련(‘17.上)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장애차별금지법 개정사항 등도 발굴
- 장애인 전용상품 활성화 등 장애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예)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장애인 자녀에 증여시 증여세 면제) 활성화, 저신용 장애인 대상 미소금융(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강화

-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모바일·ATM 및 금융회사 창구 등 장애인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7.上)

- 금융회사의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 마련 및 점포별 전담 직원 배치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용 편의 제고
- 핀테크 관련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원칙 규정

- **(금융교육 강화)** 장애인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마련하고, 시간·이동상 제약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 실시(‘17.上)

- 시각장애인도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복지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라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편

-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33개→40개)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17년중)

-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 증가 지역은 센터 신설·인력 확충, 기존 네트워크* 중복 발생 지역은 통합 등 추진

* 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자금·채무조정 중심), ②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불법사금융 상담 중심), ③ 상담·지원센터(부분적인 서민금융 상담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1~1.5시간 내 도달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도시·농어촌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

- 대중교통수단, 공익전광판, 지역신문 등 서민밀착형 매체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397(서민금융콜센터) 홍보 지속

- **(고용·복지 지원과 연계 강화)** 서민의 자활·재기를 위해 필요한 서민금융·고용·복지 서비스의 원스톱 종합 지원을 추진

- 서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통합입점(7개→10개) 등 검토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시 별도 이동없이 고용·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 시범사업* 실시(‘16.12월~‘17.3월)

* 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중앙·부천·대전)에서 시범사업 운영중

- **(전달체계 상시 개선)** 서민금융협의회*를 정례화(반기 1회)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네트워크 운영실적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17.上)

*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 캠프, 금융회사 등과 서민금융 정책을 협의·조정

핵심과제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

가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정책금융 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전년대비 +9조원)
 - (산·기은/신·기보) 중소기업 지원을 전년 대비 6.8조원 확대
 - * 산은·기은(조원): ('16)58.7→('17)62.5 (+3.8), 산·기보(조원): ('16)62.7→('17)65.7 (+3)
 - (산·기은) 중견기업 지원을 전년 대비 2.2조원 확대(19.6→21.8조원)
- **(자본시장 활용)**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 클라우드펀딩 발행지분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장외주식거래 플랫폼(KSM)에서 거래되는 경우 양도제한 예외 인정('17.3월)
 - * 일반적인 장외거래의 경우 1년간 일반투자자에 대한 양도가 제한됨
 - K-OTC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공모규제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외시장 거래편의성 제고('17.5월)
 - * (현행) 소액출자자(지분율 1%미만, 평가액 3억원 미만)만 매출신고 면제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일반주주(지분율 10%미만)의 매출신고 면제
 -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17.5월)
 - * 펀드 지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운영
 - 중기특화증권사 중간평가('17.5월)를 실시, 실적이 극히 미진한 회사는 지정취소를 검토하고, 필요시 중기특화증권사 기능 강화 방안 마련('17.6월)
- **(현장점검 강화)** 중소기업의 현장에 보다 밀착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현장점검반이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 (1월 중소기업 금융애로 점검 등)

나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강화

- **(상환유예·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중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원칙 1년)
 - *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유예, 만기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유도
- **(신규 유동성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의 신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산·기은)·보증(신·기보) 등 제공
 - * (산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暨거래 중소기업에 대해 50억원중견 70억원 이내 추가 지원 (기은) 해운업 협력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추가 지원(금리 △0.5%p 우대)
 - 특히, 사업다각화, 품목다변화 등 사업재편을 준비중인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 전용상품*을 지원
 - * 사업재편지원자금: 산은, 2.5조원, 금리 최대 △0.5%p 우대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산·기보, 3,000억원 보증료율 △0.2%p 우대, 보증비율 85%~90%
- **(중소형 조선사 지원 강화)** 해운사가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선박 건조자금에 대한 지원 강화
 - (대상)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해운사가 국내 중소조선사에 발주하는 선박 건조 대상('17.上)
 - (지원) 해양보증보험 등이 발주사인 해운사의 선박 건조자금 대출(건조금액의 80% 이내)에 대해 부분보증(예: 50%) 제공
- **(상담 및 컨설팅)** 조선·해운업 밀집지역에 설치한 현장반*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를 밀착 지원
 - *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에 설치, 각각 정책금융기관 전문인력 2인 파견
 -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해소

다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舊Fast Track) 신설

- (유동성 지원 강화) 신·기보 특별보증시 보증비율을 60~70%로 상향(舊패스트트랙 40%) * 10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0.2%p
 -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 수수료를 추가 우대(최대 0.3%p)
 -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 무보에서도 상환유예·만기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 공동지원
 -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신·기보 우대보증 지원
 - * 보증비율 85%→90%, 보증료를 △0.2%
- (이용기간) 평균적인 기업회생 기간 등을 감안, 지원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장기 이용을 방지
 - * 舊패스트트랙 및 법원회생의 경우 종결까지 3년 미만 소요
 - 다만, 종료 시점에서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 (경영관리 강화) 금감원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하여 대상기업에 대해 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연 1회)
 - 채권은행과 경영개선목표,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 중단 기준 등을 명시하는 특별약정 체결*
 - * 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 (운영기한)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B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상시 운영

핵심과제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

가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 (채무연체 사전 예방)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채무 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 (연체이전 채무조정)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확인시 일정기간 원금 상환유예 등 지원*(17.上)
 - * 예) 요건에 따라 6개월~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되, 서민층(저소득·1주택자 등)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
 - (사전경보체계)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 등을 안내(17.上)
 - * 예) 단기간에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규모가 급증한 차주 등 선별
 - (전문상담 등 제공)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을 활성화하고,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을 강화
 - (차주정보 주기적 갱신) 만기가 긴 주담대 등은 주기적으로 차주의 소득상황·소재지·연락처 등 정보 갱신 활성화(17.9월)
- (연체차주 보호) 차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연체이자율 산정체계 개편) 현재 연 11~15% 수준으로 부과되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정비* 유도
 - * 예) 점검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자율적으로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산정체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규정 마련(17.上)
 - (담보권 실행절차 개선)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강화
 - (→정책모기지부터 우선 실시(17.上)하고, 은행권 등 확산 추진)
 - * 예) (주거안정이 중요한 차주) 서민층 등에 대해 최대 1년간 경매유예 지원 (재산가치보호가 중요한 차주)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 등으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 등

나 채권추심 관리 개선 등 채무자 보호 강화

- (채무자 권리보호능력 제고) 불법 추심 피해예방,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구축('17.4월)
 -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채무자 권리보장 강화
- (민간 채권매입·추심 관리강화) 채무자가 무리한 채권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 프로세스 관리 및 부실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17.1분기)
 - * (주요내용 예시) 매입기관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과거 불법 추심 관련 기록 확인 의무(Due Diligence), 일정기간 재매각 금지 등
 - 추심위탁과 관련한 위탁자 책임을 강화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유도('17.1분기)
 - *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 채권추심회사의 감독책임 부여 등(신정법 개정)
-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부실채권 관리 방식을 채무자 채기 지원 및 관리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개선('17.上)
 - * 6개 금융공공기관(주공금, 신보기금, 기보기금, 농신보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약 22조원,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
 - 추심회수·대손상각·시효관리 등 일련의 채권관리 과정을 점진·개선*하고, 기관 자율의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유도
 - * 모호한 상각기준 정비(금융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 마련 등), 상각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 관리,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 등
 - 회수·관리 관련 직원 면책근거 마련, 기관 경영평가시 채무 조정 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 구조 개선도 병행 검토

다 채무조정 활성화 등 한계차주 지원 강화

- (연체 이전) 현재 은행권에 적용중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요 저축은행 등에도 확대 시행('17.下)
 - * 대출만기 前 상환방식 변경, 이자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 안내
 - 신용등급으로 급격히 하락하거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한계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연체 이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강구
 - (이자부담 경감)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예: 10% 수준) 설정('17.2분기)
 - * 현재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에서 이자율을 원 채무의 1/2까지 경감 가능하나 고금리(30%) 채무자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부담(15%) 지속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부담을 추가 경감
 - * 예) 프리워크아웃시 1/2로 조정된 이자율에서 30%를 추가 인하
 - (상환방식 다양화) 신복위 워크아웃시 채무자 경제여건에 따라 초기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체증식 상환방식* 등 도입('17.下)
 - * 예) 총 8년의 상환기간 동안 초기 2년에 10%, 잔여 6년간 90% 납부
 -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성실상환자*가 사고·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채무 면제 등('17.1분기)
 -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경우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Fast-Track*의 전국 확산(5개→14개 지방 법원)을 통해 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으로 신속 연계 지원('17.상)
 - *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9개월→최소3개월) 및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500만원→700만원)

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비

- (금소법 제정)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감독을 재분류·체계화하고, 전문적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17.1분기)
 - (Cooling-Off 제도 도입) 대출상품 등에 대해 우선시행(‘16.12월) 중인 금융상품 계약 철회권(Cooling-Off)을 여타 금융상품으로 확대
 - *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별법 또는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하던 숙려제도 관련 근거 조항을 금소법에 도입
 -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 * 투자성 상품 이외에도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까지 취급 가능
- (예금자보호 강화) 예금보험사고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
 -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므로 이를 예금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17.4분기)
 - 합병·전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시에도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보호한도(각각 5천만원)를 적용(‘17.下)

구분	예금금액	예금보험금 수령액 (1년 내 재부실화시)
합 병 계약이전	A은행 : 4천만원 B은행 : 4천만원	8천만원
		종전 : 5천만원 → 개선 : 8천만원

-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속 지급^{*}(은행·저축은행 업권 적용)(‘17.下)
 - * (현행) 은행은 약 5개월 예상 → (개선) 5년간 단계적으로 **7영업일** 수준으로 단축

- (맞춤형 금융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상품 접근성 제고(‘17.1분기)
 - 사회초년생(가계부채·신용관리), 은퇴준비 근로자(노후자산관리), 고령층(핀테크 이용·금융사기방지) 등 대상별·이슈별 교육 실시
-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개인 신용정보 관련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보호체계를 확립(‘17.上)
 - 신용정보법 규율대상을 금융회사로 명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을 해소
-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대부업자의 연대보증을 감축하여 제3자 피해 가능성을 경감하고 대출계약, 광고 등 주요 영업관행 개선(‘17.1분기)
 - 대부중개 모범규준 및 표준위탁계약 마련^{*}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영업을 유도하고, 분쟁·민원 등을 예방
 - * 주요내용 : 상품요건 과장 등 불건전영업 금지, 배상책임 발생시 변제방법 명확화 등
- (조치명령권 제도 정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 조치명령권^{*}(자본시장법 §416)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비
 -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산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 조치명령권의 발동 사유, 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행정지도, 자율 규제 등을 대신하여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17.3월 방안발표)

나 금융사고·금융사기 근절

- **(신종 금융사기 규제 강화)**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 새로운 유형, 피해방지 요령 전파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유사수신행위 조사·자료요구권(제좌조회권 포함)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유사수신훈지법 개정 추진, 17.1분기)
- **(보험사기 예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기반의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도입하여 「보험사기 다잡아」 업그레이드(∼17.4분기)**
 - ※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적발·제재결과 공유, 관계기관 실무 정례회의 등 공·사 보험 조사업무 협력 강화 추진
- **(민생금융범죄수익 적발노력 강화)** 서민대상 범죄로 조성된 불법자금의 흐름을 조기 적발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
 - **금융회사의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서민범죄 관련 의심거래 보고 및 FIU의 심사분석자료의 법집행기관 제공 확대**(연간)
- **(개인회생정보 공유 확대)** 개인회생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정보 공유 시점을 회생신청 직후***로 개선(17.1분기)
 - * (현행) 법원 인가시(신청 후 최장 1년 이상) → (개선) 재산동결시(신청 후 1주일 내)
 -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공유하되,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
- **(내부통제 강화)** 전 금융권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 체계 개선방안 검토(17.2분기)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업무 체계 개선

- **(판매수수료 공시체계 개선)** 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공시(17.上)*
 -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17년 1분기 중 국회 제출 예정
 - **복수상품 비교·권유시 각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 설명하고, 판매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품 판매시 별도 안내**
- **(비교공시 확대)** ISA비교공시 수준으로 투자자가 상품별 수익률·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확대(17.上)
 - (펀드) 복잡·난해한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보완하여 일반투자자를 위한 **펀드 수익률 비교공시 전용사이트(펀드다모아)** 개설
 - (투자자문) 로보어드바이저 등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익률 비교공시 체계 마련
 - (신용평가사) 부도기업의 과거 등급 추이, 등급변동 상세정보* 등 비교공시 항목 확대
 - * 등급이 큰 폭으로 변화한 기업의 명단,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
-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개인신용평가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17.上)
 - **CB사 평가지표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모형 검증체계***를 구축
 -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평가(매년)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 **CB사 신용평가지표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 개선**
 - * 제2금융권 대출, 신용정보 부족(Thin-filer) 등에 따른 불이익 해소 등
 - **자체 신용평가 결과 설명의무 강화, 'CB등급→스코어제 전환'의 중장기 도입방안 검토** 등으로 금융회사 신용평가 책임성 제고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기본 방향 >

-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 **新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제의 혈맥' 기능 강화
-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를 통해 금융업 경쟁력을 제고
-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 출시 지원

■ [핵심과제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가. 정책금융의 확장적 기초 전환
- 나.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핵심과제⑩]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 가. 제2단계 기술금융 추진
- 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및 공급 확대
- 다. 재기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

■ [핵심과제⑪]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 가.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
- 나. 금융업권별 경쟁력 제고
 - (1)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 (2) 보험업 경쟁력 강화
 - (3)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 (4) 금융업권간 시너지 제고
- 다.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한 외연 확대

■ [핵심과제⑫]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 가.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 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
- 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 라. 국민의 자산운용 지원

핵심과제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가 정책금융의 확장적 기초 전환

- **(총공급 확대)** 산·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17년중 '16년보다 8조원 늘어난 **총 186.7조원** 공급(사상최대 수준)
- 특히, 신·기보 등 보증기관은 기금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 집행

< 정책금융기관별 자금공급계획 >

구 분	산 은	기 은	신 보	기 보	합계
'16년 계획	61.0조원	55조원	43.7조원	19조원	178.7조원
'17년 계획	62.5조원	58.5조원	45.7조원	20조원	186.7조원

- **(핵심분야 집중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 수출기업, 성장 유망 기업 등 핵심분야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연중)
- **일자리 창출형·수출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16년 대비 **2조원 이상 확대**(25.6조원) 공급
- **예비중견·중견기업**에 '16년 대비 3조원 확대한 **29조원을** 공급하고 내수·해외진출·수출·성장 분야별 유망 기업에 집중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산은 **MDB(다자개발은행)** 자금(10억불) 등을 활용하여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

* 산은 글로벌파트너십 펀드(억원) : ('15) 4,000 → ('16) 2,500 → ('17) 3,600

- **(신성장산업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포함한 **미래 新 성장산업**에 '16년 대비 5조원 증가한 **85조원** 자금공급(연중)

* 시설·운영 자금 대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금융 제공

나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지원체계 효율화)** 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자금공급계획 수립, 체계적인 집행·성과평가·피드백 시스템 운영
 - **(신성장 기준 활용)** ‘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여신·투자 심사시 공통의 신성장 기준을 적극 활용(연중)
 - **(지원체계 활성화)** 신성장위원회*, 정책금융협의회**, 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지원효과 분석 및 애로사항 해소(연중)
- * 전문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 연도별·신성장분야별 정책금융 자금집행 규모 수립 등
-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 등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 채널
- **(사후점검 및 보상체계 구축)**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신성장 분야 지원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17.下)
- *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성과지표(KPI), 기술금융평가지표 등에 지원 실적 반영,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신성장 분야 지원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 확대
- **(인프라 구축)** 주기적 모형 개선, 후보품목 발굴, 사후관리 분석 등을 위해 신성장 지원시스템 및 DB 구축(17.下)
- * 산은의 신성장금융센터 및 신용정보원 TDB의 인력과 DB 등을 활용
- **(맞춤형 보증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新 정책보증 체계를 ‘17년부터 시행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 지원
 - **(창업·성장)** 창업·성장기업에는 장기 분할상환 보증구조를 도입하여, 사전 단계부터 합리적인 보증이용과 상환 유도
 - **(성숙)** 성숙기 이후 기업의 보증심사 등은 보증기관에서 은행으로 위탁하는 ‘위탁보증’ 시범사업 실시(17.下)
- * 장기보증 이용 기업(예: 20년이상)에 대한 보증심사(증액포함) 등을 은행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위탁전환 대상을 확대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유망 서비스업 지원 강화)**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을 매칭하여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
 - 재정자금과 결합하여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지원 펀드 지속 조성(16년말 1.1조원)
 - 유망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17.1분기)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신성장 산업을 지속 발굴·지원하고 우수 운영사와 민간 참여확대를 위해 시장친화적 투자방식* 적극 활용(연중)
- * 예) 신산업 펀드(3,000억원) 조성시 예산(산업부 100억원)의 후순위 참여, 초과 수익 민간투자자 배분, 성과보수 지급 등 활용(16.12월)
- **(금융권 공동 일자리박람회)** 은행, 정책금융기관, 핀테크사 등과 협업을 통해 ‘금융권 창업·일자리박람회’ 매년 개최 검토
 - * 16.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취업생과 중소기업간 구인·구직 매칭, 창업경진대회 등 지원(→ 261개 기업, 약 5,200여명 구직자 참가)
- **(취업연계)**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 1년 이상)에 대해 취업 알선 지원*(금융권 협업)
 - * 취업컨설팅 제공, 성실상환증명서 발급,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중소기업 취업 1년 이상 유지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등
- **(신규일자리 창출)**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활성화, 독립투자자문업 허용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 일자리 창출(상시)
 -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서 금융·IT 부문 인력을 총 400여명 신규채용
- 외은지점 등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에 원활히 진출하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국내진입 관련 애로를 적극 해소

가 제2단계 기술금융 추진

- **(기술금융 공급확대)** 기술금융 대출·투자 공급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17년까지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 공급(누적) 추진

* [대출] (당초) '17년 63조원, '19년 100조원 → (확대) '17년 80조원, '19년 130조원
[투자] (당초) '17년 0.5조원, '19년 1조원 → (확대) '17년 1조원, '19년 4조원

- **(TECH 평가 개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TECH 평가")시스템 개선('17.1월)

- 과거 기술금융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기간 내 실적만 평가하여 은행권 경쟁유인 제고

* (현행) 평가지표의 38%를 과거 기술금융 대출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 (개선) 과거 기술금융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기간 실적만 평가

- 우수 기술기업 지원 강화*를 유도하고 평가실적 경쟁으로 발생하는 초소액·초단기 대출 등 일부 부작용 사례를 방지

* 우수 기술기업 지원시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배점을 2배(10점→20점)로 확대하고, 지원형태를 3가지로 세분화(①저신용·기술기업, ②고성장 기업, ③ 新성장 업종 지원)

- **(TDB 인프라 정비)** TDB 정보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TDB 보유정보 적시성 개선 및 TDB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 TDB가 단순 정보집중·제공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석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1년으로 최신회('17.1월)

- 은행·TCB에 한정된 이용기관을 대학, 연구소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TDB 비용 체계를 대폭 개선('17.1월)

* (현행) 1,000만원 이상 → (개선) 대학 무료사용, 연구소 등은 200만원 수준 축소

- **(TCB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 TCB의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고, TCB 평가서의 활용도를 공공분야로 확대

- 재평가 후 기술등급이 상승된 기업이 금리 우대 및 대출한도 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 기술기업 특별옐렌딩' 도입('17.2월)

* (대상) 기술등급 상승기업, (인센티브) 금리(△10bp), (한도) 100억 → 120억

- 유망 서비스 업종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기술평가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 제도*' 도입('17.1월)

* 1년간 기술변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로 평가 대체

- 정부조달, R&D 등 공공분야로 TCB 평가서 활용 확대 추진

-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은행 자체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서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 은행과 계열관계가 있는 중기특화 IB 등이 실시한 기술금융 투자를 TECH 평가로 인정하여 기술금융 투자확대 유도('17.1월)

- 성장사다리 펀드가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용사 인센티브 체계 개선하고 기술금융 펀드 추가 조성(3,000억원)

* 펀드 투자액의 20% 이상을 기술금융 투자로 공급시 운용사 성과보수 지원

- **(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통합 여신모형'을 마련하여 기술금융 체계를 완비('17.上)

* 기술평가 모형과 여신심사 모형 일원화 방안, 향후 데이터 축적을 위한 지침 등

-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TF*' 운영('17.1월)

* (구성) 금융위, 금감원(데이터 축적, 검증 등 필요시 참여), 은행권, TCB, TDB 등

- '19년까지 통합 여신모형을 시범운영*하고 '20년부터 본격 실시

* 바젤 II에 따라 은행 여신모형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필요 : 기술금융 실시('14.6월) 이후 5년('19.6월)

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및 공급 확대

- (상장·공모제도) 새로운 상장·공모제도*를 '17년초 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

* 이익이 없더라도 ① 시가총액·매출액·매출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② IPO과정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경우(PBR 200%이상), ③ 상장주관사의 특별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자격 부여

- 기업의 성장잠재력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질적심사 기준 마련('17.1월)

- (코스닥·코넥스시장) '17년중 코스닥시장에 80개 수준의 신규상장 기업을 유치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수를 150~160개 수준으로 확대

* '16년 코스닥 신규상장 : 82개사 / 코넥스 전체 상장법인수 : 141개사

- 코넥스 특례상장요건 완화, 지정자문인 제도 개선,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17.4월)

-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시교육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투자매력도 제고

* 증권사의 코넥스 기업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지원, 업종별 IR 활성화 등

- (클라우드 펀딩) 더 많은 창업기업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16.11월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16년 실적) 성공기업 110개, 펀딩액 174억원 조달 → ('17년 목표) 200개 내외 300억원 조달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청약시스템 인터페이스 개편 등 편의성 제고('17.5월)

* (현행)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
→ (개선)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업체명·중개업체명, 펀딩기간 등 광고 가능

- 펀딩 마중물 역할을 하는 'Seeding 펀드'(80억원) 신설('17.1분기)

- (성장사다리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액을 확대('17.上)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펀드 회수자금 채투자 및 신규자금 조달을 통해 9,400억원(기존자금 채투자 2,600억원 + 신규자금 6,8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 조성

* 신산업펀드(3,000억원), 기술금융펀드(3,000억원), 스타트업펀드(800억원), 재기지원펀드(2,000억원), 세컨더리펀드(600억원) 등

** 성장사다리펀드 누적 조성액은 6.3조원 → 7.2조원으로 확대

- 기업 성장단계별* 체계적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창업) 스타트업펀드 등 1,800억원 → (성장) 기술금융펀드 등 5,000억원 → (회수) 중간 회수단계에 참여하는 세컨더리펀드 등 2,600억원

⇒ 신산업펀드(3,000억원), 기술금융펀드(3,000억원), 스타트업펀드(800억원), 재기지원펀드(2,000억원), 세컨더리펀드(600억원)

** 투자금액 : ('14) 0.47조원 → ('15) 1.14조원 → ('16) 0.99조원 → ('17 목표) 1.3조원
⇒ 창업·벤처 부문 1,800억원, 기술가치 부문 3,000억원 등 지원 예정

다 재기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

- (재창업지원 확대) 신·기보, 중진공, 신복위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창업지원*' 사업 활성화('17.上)

* 「재창업지원」사업: ❶재기신청자 정책금융기관 채무 최대 75% 감면, ❷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❸신규 자금지원(중진공대출에 신·기보가 각각 25% 보증 공급)

- 내년도 재기지원 보증공급은 올해 신·기보 공급(약 10억원)의 5배 수준인 50억원(신·기보 각각 25억원)으로 확대

- 신·기보, 신복위 등과 함께 '재창업지원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보완 사항* 발굴

* (예)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 지원을 위해 도덕성 평가를 2단계 심사(보증기관, 신복위)에서 1단계 신복위 심사로 단축

- 재창업기업의 보증 수수료를 감면(현 1.2% → 1.0%)하여 정책 금융 이용 부담 경감

- 신보는 재창업지원 사업 취급기관을 주요 거점점포에서 소 점포로 확대

- (경영컨설팅 강화) 실패 후 재기 지원을 받고 성공적으로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신·기보)의 컨설팅 지원('17.上)

* 재기기업의 경영관련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후 재무관리, 마케팅, R&D 등 경영 실무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핵심과제①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가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

- (금융개혁의 상시화) 기존 금융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개혁과제 제도화) 국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금융개혁 관련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① 국회 계류 법률 : 은행법, 자본시장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법률
② 입법절차 진행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 금융개혁의 추진 단계에 맞추어 추진 체계를 정비*

- 금융개혁 초기에는 새로운 과제 발굴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앞으로는 기존 과제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

* 제2단계 금융개혁 추진시에도 "3+1 추진체계"(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 추진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개혁 자문단) → 「금융개혁추진위원회」로 추진체계 단순화

-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한시·특별체제인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한 상시 개혁체제로 전환

- (이행점검 강화) 많은 개혁 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既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을 강화

*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 만큼 기존 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금융 개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

-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 통해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추진체계) 분기별로 월별 테마를 선정하고 소관부서와 점검 실시 후 옴부즈만을 거쳐 금융발전심의회에 보고

- (점검주제) 기존 금융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신규 도입되는 금융개혁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기능도 강화
 - (점검대상) 점검테마 관련기관을 방문하되, 정책수혜자(소비자, 일반기업 등)도 포함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
 - (신규과제 발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를 위한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 발굴은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행
 - 특히,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과제를 적극 개발
-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규제민원포털 개선, 비조치 의견서 및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
- (금융규제 민원포털) 금융회사가 보다 편하게 유권해석 등을 문의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better.fsc.go.kr)

* 예) 규제 카테고리별 메뉴 설정, '자주 묻는 질문' 코너 등 신설

-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반기별로 각 업권 협회를 통해 비조치 의견서를 접수하고 일괄회신* 지속 추진(연중)

* '16.2월과 7월 총 885건 그림자규제에 대한 비조치이견서 일괄회신 한 전례

-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옴부즈만* 블로그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등 불합리한 행정관행 지속 개선

* '16.2월 출범,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고 금융현장의 고충민원 접수·개선권고 등 수행

- (외국계 금융회사 TF 운영) 분기마다 외국계 금융회사 TF를 운영하여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 지속 발굴·해소

- (패자부활전) '불수용 과제'도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 관리('17년말)

* (수용과제) 분기별 성과평가회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성과 보고회 개최

* (불수용과제) 반기별 재검토회의 → 연말 패자부활전 → 수용여부 재결정

- (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 금융개혁의 최종수혜자인 일반 국민과의 소통 통로도 확대, 홍보 지속 강화

- (기업·소비자 점검 확대) 월 1회 일반 기업·금융소비자 현장 방문* 실시를 통해 최종 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효과 확인

* 예) IPO 개선방안 관련 상장 준비기업 간담회, 보험정보 카페회원 간담회

- (취약계층 현장점검 추진)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계층까지 점검대상에 포함, 금융개혁 사각지대 지속 해소

- (현장메신저 확대 개편)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 등으로 현장메신저*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반영

*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부서 실무자로 구성 → 분기별 간담회로 의견 청취

- (메일링 서비스 실시)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주요 개혁과제 추진현황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 매월 송부

* 해당 이메일 계정을 상시 건의과제 접수가 가능한 쌍방향 소통 통로로 운영

- (지역금융협의회 구축) 금감원 지원, 신·기보,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지역 금융기관간 연계 강화, 이슈 발생시 적기대응('17.1분기)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지소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금융현안 논의, 해결방안 모색

나 금융업권별 경쟁력 제고

(1)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처분·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
 - **(운용 자율성 확대)**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 * 생전신탁(유언대용신탁) :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위해,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
 -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맞추어 (자산에 결합된)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확대
 - 아울러,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
 - 자기신탁*, 수익증권·신탁사채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
 - *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처분·운용한다고 선언(신탁선언)함으로써 설정되는 신탁
 - **(이용 편의성 제고 등)**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지시도 제한적 허용
 -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 설명·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장치 등은 한층 강화
 - 「신탁법」상 수익증권발행신탁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규제 적용
- ➡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 전반 개편 추진
(‘17.1~6월 TF 운영 → 10월 신탁업법 제정안 국회제출)

(2) 보험업 경쟁력 강화

- **(보험업 자율성)** 표준약관은 민간(보험협회)이 자율적 제·개정토록 하고,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 개편(‘17.上,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 **(일반보험* 경쟁력)** 손보사가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17.上 방안마련 → ‘17.下 법령 개정 추진)
 - *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저축요소) 외 해상·화재·배상책임보험 등
 - 경영공시기준*과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 부여
 - *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간玉石가리기
 - 국내 손보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재보험 수지 역조 : 연 2조원)을 개선하기 위해 재보험 규제체계 개선을 검토*
 - * 예) 일정수준 원수보험 보유의무 등 손보사의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 마련
- **(단종보험* 활성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 보험상품(단종보험)에 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7.上)
 - * “單種보험” : 재화·용역의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하여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例 : 항공사·여행자보험, 대형가전판매점·가전EW 등)
 - 항공사(여행자보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보증기간연장보험 : Extended Warranty) 등 다양한 단종보험 판매채널·방식 확대 허용
 - 보장내용이 단순한 1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도록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등 대폭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기본형 + 다양한 특약」 구조로 전환하고 보험금 미청구자 대상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17.2분기)
 - *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 미청구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할인

-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암·사망보험 등과 분리·판매**(18.4월 시행)하도록 규정(17.1분기)

-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중단없는 보장을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 방안*** 마련(17.4분기)

* 퇴직 후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 허용,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기간 중에는 개인실손의료보험 일시 중지제도 등 검토

□ **(자동차보험 합리화·선진화)**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전기자동차 등 기술 진화에 선제 대응**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폭 차등화*** 및 **공동인수 대상 명확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지속

* (현행) 가해자·피해자 구분없이 할증 적용 → (변경) 가해자·피해자 할증 차등화

-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응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출시 등 지원**(17.2분기)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 전기가동력인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

-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 착수(17.2분기)

* (예) 사고책임 부담주체(운행자vs제조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

□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전세금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보장대상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편의성 제고

*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단, HUG는 전세금을 5억원 이하로 제한)

-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인하(0.192%→0.153%, 3.9bps↓)(17.上)

* 전세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대주보(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

** 가입시 보험회사가 임대인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 독려**

(3)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 **(거래소 구조개편)**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대체거래시스템) ATS 거래량 한도규제 완화**(6월 예정)와 함께 **ATS 추진 로드맵 마련**(17.1분기)

-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 시점에 ATS와의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설립 장애요인 해소

* ATS 매매대상상품에 ETF, ETN, 채권 추가 등

□ **(초대형 투자은행)** 초대형 투자은행이 **기업금융 등 새로운 영업을 차질없이 개시**(17.2분기)할 수 있도록 준비

- **기업금융자산 범위·산정방식 구체화, 종합투자계좌 운용규제, 새로운 건전성 관리체계 등 제도정비 마무리**(17.2분기)

* 발행어음 조달액의 50% 이상, 종합투자계좌 조달액의 70% 이상은 기업금융 자산(기업대출, 회사채매입, 지분투자, PF투자 등)으로 운용

- **초대형 투자은행의 기업금융 실적 보고·점검체계 구축**(17.3분기)

□ **(국채 담보 재할용)**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17.上)

- **현행 질권설정 방식 외에 증권대차 방식의 담보 제공 허용**

- **다만, 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에 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완장치 마련**

*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담보제공자에 사전 통지의무 등

□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고 **전자증권도입 로드맵을 마련**(17.下)하는 등 **19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 전자증권법(16.3.22 공포)은 공포 후 4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 시행

□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

○ 장내파생상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상장요건을 간소화*('17.1분기) 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 부문**에 대한 新상품 상장 추진

* 기초자산의 기본범위(예: 거래소 상장주식 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지수)만 금융위에서 승인하고 거래소에서 개별상품(예: KOSPI200) 상장여부를 결정

** ETF, 미니달러, 해외지수, 초장기국채, 개별주식 등

- 거래효율성을 위해 거래승수를 조정('17.1분기)하고 투자자 위험 관리 성향에 맞게 파생상품 진입규제를 합리화*('17.2분기)

* 헤지 전용계좌 도입, 옵션매수거래의 기본예탁금 인하 등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

- CCP 청산대상 상품 확대*, 증거금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17.1분기), 거래정보저장소(TR) 제도화 등 추진

* 달러 IRS('16.12월), NDF(non-delivery forward, '17년) 등 청산대상상품을 추가

□ **(파생결합증권)** ELS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ETN 등 대체상품 활성화 도모

○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제도화('17.2분기)

○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17.2분기)

○ 손실제한형 ETN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17.1분기)하고, 해외 ETF·ETN 상품의 국내 상장도 활성화

(4) 금융업권간 시너지 제고

□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사가 시너지 강화 및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기본 틀 개편('17.6월 세부방안 마련)

○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내부 경영관리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고객정보 공유를 확대 하되,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내부통제장치 강화,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제재

○ 지배구조 개선, 사업부문제 활성화 및 후선업무 통합 등 금융 지주회사 중심의 업무수행 지원('17.上)

-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회사 인사·평가 등 권한 강화를 통해 금융지주의 책임경영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화

*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 및 그룹차원의 위험 관리 협의·의결기구(REC) 설치 등

- 겸직·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사업부문제)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가능

* 법인별 조직체계에 고객군별·기능별 사업부문(예 : 개인금융/기업금융)을 결합

-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비용 시너지 제고*

*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서 후선업무 전담자회사 지배를 허용

□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종합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수요를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17.3분기)

* 금융복합점포 시범운영('17.6월까지) 성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업권 합동으로 마련

다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한 외연 확대

- (금융외연 확장) 저성장·저금리 극복 및 新시장 금융주도권 선점을 위해 금융회사·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 업계를 중심으로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한 정례 회의체(해외진출동향 점검회의) 운영
 - 동남아시아 등 新시장에 한국형 금융인프라 수출 적극 추진
 - * 기재부(KSP), 외교부(ODA) 등이 운영하는 해외 진출사업 적극적 참여 지속
 - ** 실무급회의·초청연수·금융협력포럼 등을 통해 금융인프라 수요 적극 발굴
- (금융의 글로벌위상 강화) 금융중심지 역량 제고 및 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국제금융거래 활성화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정책목표로 하는 「제4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7~19)」 수립(17.上)
 - 현지규제로 인한 해외진출 과정의 애로해소 등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체^{*} 확대 등 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
 - * 한·중·일(06), 일본(12), 영국(14), 인니·베트남(15) 등과 정례회의 개최 중
- (자본시장 국제화) 외국인 통합계좌^{*} 단계적 도입, 국경간 펀드 개방(펀드패스포트) 준비^{**} 등 자본시장 국제화 추진
 - *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통합계좌(일괄주문·결제) 및 상장채권 일괄주문 도입 방안을 검토·추진(17.上)
 - ** 펀드패스포트 준비를 위한 국내 펀드인프라 정비를 위한 법 개정 검토
 - 거래소 국제화를 위해 해외 주요 거래소(대만·호주·인도) 등과 '글로벌지수 및 지수연계상품 공동개발 협의체' 구성(17.3분기)
-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 외은지점 영업규제(신용·공여한도 등)를 주요국 사례 및 외은지점 특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17.6월)
 -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방안 마련 추진(연중)

핵심과제⑫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가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 (규제·제도 혁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의 재설계 추진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17.2분기)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 검토
 - * 비조치의견서,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 규제를 재검토(17.1분기)
 - * 예 :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방식 확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등
- (신기술·금융 융합)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16.12월 은행·금투업권 출범)^{*}'에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 금년중 참가회사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일럿 서비스 개시 추진
 - ** (은행)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절차 간소화, (금투)통합 인증시스템 구축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 및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17.上)
- (지원체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지원을 강화
 - 핀테크 산업 성장단계에 맞추어 감독·지원을 정교화·체계화^{*}하고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17.1분기)
 - * 창업초기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지원 → 빠른성장 : 거래건전화, 소비자보호 강화
 - **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교육·지원 강화,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지원 강화 등
 -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17.1분기)
 - *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별 핀테크지원기구, 유관기관(성장사다리펀드, D.Camp) 등
 -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 * (16년) 5천억원(산은기은) → (17~19년) 3조원(산은기은·신보·기보·성장사다리펀드)

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

- (바이오페이 도입) 실물카드 없이 생체정보(예: 손바닥 정맥)만으로 카드결제 가능한 거래방식 시범도입('17.上)
 - 관련 법규 정비·유권해석* 등을 통해 도입기반 마련 후, 의향 있는 카드사부터 시범운영하여 안전성·편의성 등을 검증
 - * 예) 법규해석상 생체정보 인증을 신용카드 제시로 보아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서명·비밀번호 입력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검토 등
- (인터넷전문은행) 24시간 이용가능한 「내 손안에 뱅크」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 영업개시(케이뱅크 '17.2월/카카오뱅크 '17.2분기, 잠정)
 - * (새로운 서비스모델)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결제·송금,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음원·게임포인트 등 다양한 이자 제공, 온라인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등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고도화) 이용채널·대상계좌를 확대('17.4월)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이용가능하도록 서비스 고도화('17.10월)
 - * (채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accountinfo.or.kr) → 은행창구 및 모바일 확대/ (대상계좌) 잔액 30만원계좌 → 50만원 / (이용시간) 09~17시 → 09~22시
- (보험다모아 개선)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 조회 기능과 인터넷 포탈 간 연계서비스를 개시('17.7월)
 - 양방향 소통을 위한 보험상담 게시판 개설, 소비자에 유익한 보험정보 안내 강화 등 홈페이지 개선 추진('17.4분기)
- (비대면 실명거래 확대) 비대면 실명확인의 적용대상 확대 및 시각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17.1월)
 - * 법인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장애인고령자의 APP 접근성에 관한 권고규정 신설
- (빅데이터)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분석·지원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역량 제고('17.上)
 - 신정원에 신용표본연구 DB*를 구축하여 핀테크, 창업기업 등에게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계·공공기관 등의 활용 지원
 - * 신정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전체의 2% 수준으로 샘플링한 후 비식별처리한 데이터
 - 금융회사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수 활용사례를 전파·공유 하고,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

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 (추진 전략) 우선 기존 금융업법 규제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17년중 1단계로 추진
 - * ① 위탁테스트: 기존 금융회사가 미인가 기업을 대신하여 미인가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
 - ② 비조치의견서: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한 영업에 대하여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적용대상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제재를 면제
 - ③ 지정대리인: 미인가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 1단계 테스트베드의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 확대 시행방안 검토
- (방안별 추진계획) 위탁테스트, 비조치의견서 방식을 먼저 가동('17.上)하고, 지정대리인 방식도 업무위탁규정 개정 후 시행('17.下)
 - 산은·기은 내에 위탁테스트 전담 지원인력을 두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서비스 개발업체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위탁테스트 개시('17.上)
 - 필요시 핀테크지원센터 및 핀테크협의회 등과 함께 위탁테스트 활성화 협의체 운영
 -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법령에 따른 제재를 면제하는 형태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적극 유도('17.上)
 - 핀테크업계 등을 통해 발급수요를 일괄 조사하여 신속 검토
 - 미인가 업체가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이 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 '17.下)
 - 지정대리인 자격을 갖춘 혁신적 신금융서비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시 금융위 내부 또는 민간자문기구로 분과별 심의위원회 운영

라 국민의 자산운용 지원

- **(자산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17.5월 업무개시), **독립투자자문업****(17.3월 등록요건·절차 신설)을 통해 **對국민 금융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기반 강화**
 - * 테스트베드(1차 : 1~4월, 2차: 2분기) 통과 후, 대고객 서비스 실시(17.5월)
 - ** 독립투자자문업 제도개선을 마무리(17.3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에서의 조기 정착 유도(17.上)
- 금융상품의 **자문부터 구매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따른 구매시 투자권유절차*** 정비(17.上)
 - * 투자자가 자문업자에게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을 단순구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
- **(ISA) 출시 1년(17.3월) 성과평가 후, ISA 세제혜택 확대,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17.下, 관계부처 협의)
 - **비과세 한도**(현행 200~250만원)를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은퇴 노령층 등으로 단계적 확대**
 - **결혼·주택마련 등 긴급 생활자금 수요를 위한 중도인출 허용 등**
 - * ISA 세제혜택을 현행대비 2배 확대, 중도인출 허용, 만60세 이상 노년층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
- **(펀드시장 활성화) 성과보수 펀드 출시**(17.1분기), **우체국·상호 금융 펀드판매 허용 및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 확대 추진**(17.上)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액티브 ETF, 창업·벤처 PEF 등 **다양한 펀드상품 출현 도모**(17.1분기)
- **(개인연금법 제정)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개인연금법 제정***(17.2분기 국회제출)
 - *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도입,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도입
- **(고령화 대비 보험) 신체적·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선*** 추진(17.4분기)
 - * 예) 노후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장기 간병보험 표준화 유도 등